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외교학석사학위논문

경제제재 대상국들의
경제제재 대응방식에 관한 연구
북한과 리비아의 사례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도 준 우

경제제재 대상국들의 경제제재
대응방식에 관한 연구
북한과 리비아의 사례

지도교수 윤 영 관

이 논문을 외교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도 준 우

도준우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2년 8월

위 원 장 전 재 성 (인)

부위원장 조 동 준 (인)

위 원 윤 영 관 (인)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제재에 대한 북한과 리비아의 대응을 다루고 있다. 북한과 리비아는 테러혐의로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부과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제재에 대해 양국의 대응은 판이하게 달랐다.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제재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책을 고수하였다. 심지어 2006년에 핵 실험을 감행하여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에 반해 리비아의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제재 때문에 테러용의자를 국제사회에 인도하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등 자신의 정책을 변경하여 경제제재를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북한과 리비아의 정책적 대응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경제제재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상당히 많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성을 측정하거나 경제제재의 전략적 특징들을 찾아 성공요인을 분석하거나 단일사례로서 제재대상국의 정치-경제 구조를 파악하는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슷한 권력구조를 가진 두 나라의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들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 졌던 국내정치-경제 구조를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경제제재에 대한 북한과 리비아의 서로 다른 대응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양국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았던 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를 분석시기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시기 경제제재라는 대외적 변수와 국내정치-경제구조라는 대내적 변수가 경제제재에 대한 양국의 대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변수들을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우선 대외적 변수에는 경제

제재의 경제적 효과와 국제공조가 있다.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가 클수록, 즉 제재를 통해 경제적 손해를 많이 주면 줄수록 제재를 받는 대상국은 자신들의 정책을 변경할 유인이 커진다. 또한 국제공조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재대상국과 무역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미국의 경제제재에 동참하는 국가가 많을수록 제재대상국은 자신들의 정책을 변경할 유인이 커지게 된다. 다음으로 대내적 변수는 정치구조와 경제구조로 세분화 될 수 있다. 정치구조는 제재대상국의 정치 안정성에 따라 정책 변경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구조는 제재대상국의 경제가 제재에 취약한 구조인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제재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일수록 정책 변경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은 변수들을 바탕으로 북한과 리비아 사례를 살펴보면 대외적 변수에서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는 양국이 비슷하거나 북한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고, 경제제재의 국제공조는 양국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대내적 변수에서 정치구조는 리비아 보다 북한이 더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중과 지배집단과의 관계에서 북한은 리비아 보다 더 밀착되고 안정적이라고 파악된다. 경제구조를 살펴보면 북한은 폐쇄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리비아는 개방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석유라는 소득 창출원으로 인해 리비아가 제재에 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과 리비아의 사례에서 양국이 서로 다른 대응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정치구조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경제제재로 인해 제재대상국의 경제적 손해가 크더라도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면 자신들의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미국의 경제제재, 북한의 대응, 리비아의 대응, 정치-경제 구조, 정책변화

학번: 2009-20112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선행연구의 검토	3
3. 연구설계	8
1) 연구의 분석틀	8
2) 사례 및 시기의 선정	9
3) 연구방법	12
4) 자료	12
4. 논문의 구성	13
II. 미국의 경제제재와 북한과 리비아의 대응	16
1. 경제제재의 정의와 방법 그리고 목적	16
1) 경제제재의 정의	16
2) 경제제재의 방법	17
3) 경제제재의 목적	20
2. “불량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22
1)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22
2)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	26
3) 양국에 대한 미국 경제제재의 특징	31
3. 미국 경제제재에 대한 북한과 리비아의 대응	34

1) 북한: 돌격대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자	34
2) 리비아: 우리 모두 부자가 되자	39
Ⅲ. 북한과 리비아의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방식 차이의 원인	48
1. 대외적 요인	49
1) 미국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의 강도	49
2) 미국 경제제재의 국제공조	51
2. 대내적 요인	55
1) 양국의 체제적 특징: 우리식 사회주의 국가 VS. 지대국가	55
2) 북한과 리비아의 정치적 구조 비교	61
3) 북한과 리비아의 경제적 구조 비교	68
3. 대응방식의 차이를 야기한 원인분석: 대외적 요인 VS. 대내적 요인	71
1) 대외적 요인에 대한 고찰	72
2) 대내적 요인에 대한 고찰	74
Ⅳ. 결론: 요약 및 시사점	81
참고문헌	86
부 록	96
Abstract	102

표 · 그림 목차

<표 1-1> 핵개발을 시도하였다가 포기한 국가들	11
<표 2-1> 80년대 이후 북한의 미사일 수출 현황	24
<표 2-2> 80년대 이후 미국과 UN의 주요 대북한 경제제재의 내용 ...	25
<표 2-3> 80년대 이후 미국과 UN의 주요 대리비아 경제제재의 내용	28
<표 2-4> 1990~2008년 북한의 경제상황(억 달러, %)	37
<표 2-5> 리비아의 협상과정	42
<표 2-6> 리비아 전체투자 중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율(1970-1997)	44
<표 2-7> 리비아의 연도별 GDP, 수출총액, 석유수출총액	46
<표 3-1> 1991~2008년 북한의 주요 교역국 교역량(단위: 백만\$) ...	53
<표 3-2> 리비아 원유 5대 수입국들의 연도별 수입량(단위: 1000b/d)	54
<표 3-3> 사회주의의 사회체제 영역	56
<표 3-4>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 현황	63
<표 3-5> 대외적 변수의 효과 비교	72
<표 3-6> 대내적 통치구조의 차이	77
<그림 1-1> 논문의 변수 구조	9
<그림 3-1> 북한 주요 교역국들의 무역액 변화(단위: 백만\$)	52
<그림 3-2> 리비아의 5대 원유 수입국들의 연도별 수입추이(단위 1000b/d)	54
<그림 3-3> 북한의 정치체제	62
<그림 3-4> 리비아의 정치체제	65
<그림 3-5> 북한과 리비아의 정치적 통제 구조비교	67
<그림 3-6> 리비아의 소요사태	79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미국이 실시한 경제제재의 효과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의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성이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경제제재 대상국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혀야 한다. 둘째, 이와 더불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에 대해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미국이 실시한 경제제재를 살펴보면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제재는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반면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실패했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핵문제에 관해서는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리비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들 수 있으며,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북한과 이란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리비아 사례를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북한의 사례를 비교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과 리비아에 경제제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북한은 1987년 KAL기 폭파사건으로 인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이후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기 시작했다.¹⁾ 1993년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핵문제까지 불거졌는데 1993~1994년의 1차 핵 위기는 우여곡절 끝에 1994년 제네바합의로 해소되었으나 2002년 10월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이 발각되면서 2차 핵 위기가 시작되었다. 2차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6자회담이 진행되었고 2005년 9.19 합의로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북한의 불법행위로 인해 미국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anco Delta Asia)를 ‘돈세탁우선우려’지정하면서 제재를 가하고 나섰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미국은 금융제재를 해제하고 다시 6자회담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6년 북한의 지하핵실험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 때문에 미국은 핵확산금지과 관련된

1) 북한은 사실 1950년대부터 미국의 제재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때의 경제제재는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의 경제제재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경제제재를 부과하였고 UN은 안보리 결의안 1695호와 1718호를 채택하여 북한에 대해 제재하였다. 이후 2007년 9.19합의의 실행을 위한 2.13합의가 도출되었고 2008년 10월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도 해제하여 경제제재를 완화하기도 하였지만 이후 2차 핵실험 등으로 북한의 핵문제는 아직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리비아의 경우 70년대의 테러행위²⁾에 대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면서 미국의 경제제재가 시작되었는데 1982년 미국은 리비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리비아 산 석유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다. 이후 미국과 UN은 리비아에 대해 본격적으로 경제제재를 취하게 되는데 이는 1986~1989년에 있었던 세 건의 폭탄테러가 원인이었다. 그 중 첫 번째는 1986년 베를린에 있는 라벨르 나이트클럽 폭파사건³⁾, 두 번째는 1988년 로커비 상공에서 발생한 팬암기 폭파사건, 세 번째는 1989년 니제르 상공에서 발생한 UTA항공기 폭파사건이 그것이다.⁴⁾ 이 세 사건으로 미국과 리비아의 양국관계는 악화되었고 UN차원에서도 리비아에 대해 경제제재가 부과되었는데 UN은 1992년과 1993년에 안보리 결의안 748호와 883호를 통과시켜 비행금지 설정과 금융분야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였다. UN의 경제제재조치 이후 1996년 미국은 이란과 리비아가 세계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있다는 명목 하에 이란-리비아 제재법(ILSA: Iran-Libya Sanctions Act)을 통과시키는데 이 법은 국제연합의 경제제재조치와는 별도로 리비아의 석유개발을 위하여 연간 4,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 각종 경제제재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으로 인해 리비아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전해진다.⁵⁾

2) 리비아는 1972년 뮌헨 올림픽에 출전한 이스라엘 선수들 암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어 왔다. 프레시안, “뮌헨 올림픽 참사, 시작부터 그 이후까지”, 2006. 02. 0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60208153030&Section=

3) 1986년 서 베를린의 라벨르(La Belle) 나이트클럽 폭탄테러로 3명이 사망하였는데 그 중 2명은 미국인 기술자였고 100여명의 미국인 기술자들과 여성들이 부상을 당했다. 이 나이트클럽 폭탄테러의 배후로 리비아가 지목되었고 이는 1986년 미국의 리비아 공습의 빌미가 되었다. Lisa Anderson, "Rogue Libya's Long Road", *Middle East Report*, No. 241, Winter, 2006, p43.

4) 홍순식,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실효성: 리비아 사례와 비교”, 『東亞研究』, 第 53輯 2007, 08. p516.

이처럼 북한과 리비아는 1980년대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미국과 UN의 경제제재를 받아왔다.⁶⁾ 하지만 미국과 UN의 경제제재를 부과 받은 이들 두국가의 정책변화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나온다. 북한의 경우 지독한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사일 시험 발사와 지하핵실험 등의 대량살상무기 개발하고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도 핵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폐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반면 리비아의 경우 미국이 주도한 경제제재를 부과 받은 이후, 1999년에는 로커비 팬암 항공기 폭탄사건의 용의자를 UN에 인도하였고 2003년에는 미국, 영국과 비밀협상 끝에 공식적으로 모든 핵을 비롯한 모든 대량살상무기(WMD)프로그램을 폐기했기 때문이다.⁷⁾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과 UN의 경제제재를 받은 북한과 리비아가 왜 다른 정책적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 그 원인을 찾아보고자한다.

2. 선행연구의 검토

경제제재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방향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국제정치학 이론적 측면에서 경제제재를 설명하는 것이고 둘째는 실제 경제제재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제재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경우에 또 3가지로 나뉘질 수 있는데 첫째는 경제제재의 일반론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연구는 경제제재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제재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분석하고 하였다. 둘째는 경제제재가 부과된 특정 사례에서 경제제재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분석하는 경우로 단일사례 연구가 많았다. 셋째는 경제제재가 부과된 특정 사례들을 서로 교차분석 내지는 비교하여

5) 이란-리비아 제재법은 2001년 미국에서 한 차례연장 되는데 이때 리비아의 석유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4,0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6) 본 연구에서는 UN이 북한과 리비아에게 부과한 경제제재도 미국의 경제제재로 보았다. 엄밀히 말하자면 UN의 안보리 결의안은 미국이 두 국가에게 부과한 경제제재는 아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북한과 리비아에게 내려진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제재는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경제제재의 범위를 UN이 부과한 경제제재까지 확장시켰다.

7) 동아일보, “핵개발 두 손 든 리비아...북한의 선택은?”, 2003. 12. 21
<http://news.donga.com/3/all/20031221/8013064/1> (검색일: 2012. 04. 05)

경제제재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분석하는 경우로서 두 번째, 세 번째 범주의 연구들은 경제제재 자체에 대한 분석보다 제재대상국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국제정치학이론으로 경제제재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대표적인 것은 Keohane and Nye의 *Power and Interdependence*를 들 수 있다. Keohane과 Nye는 상호의존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두 국가 사이에서 의존적이지 않은 국가는 좀 더 의존적인 국가, 즉 민감성(sensitivity)과 취약성(vulnerability)이 더 큰 국가에 대해 권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비대칭적 관계에 있어 의존적이지 않은 국가는 의존적인 국가의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이 군사적 행동이지만 이는 극단적 상황에서 나올 수 있으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보다 적은 비용이 드는 경제적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⁸⁾ David A. Baldwin은 그의 저서 *Economic Statecraft*에서 경제적 강압을 해외경제정책(foreign economic policy)의 한 종류로서 파악하고 있는데 그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 하여금 경제적 강압을 통해 X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 정의한다. 또 제재 시행국가는 제재 대상국가에게 비용과 이익의 비대칭적 선택지를 보여줌으로서 제재 대상국가가 X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⁹⁾ 하지만 이 두 연구는 기본적으로 경제제재를 국제체제에 변화를 주려는 도구로서 이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재의 전략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다음은 국제정치학적 의미에서의 경제제재가 아닌 경제제재 자체에 대한 연구들인데 우선 첫 번째로 경제제재의 일반론에 관한 설명이다. 이 범주에 속하는 연구는 대표적으로 Hufbauer와 Schott의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를 들 수 있다. 이들은 1914부터 1990년 냉전의 종식까지 115개의 경제제재 사례를 분석하고 성공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이들은 정치적 변수와 경제적 변수를 사용하여 경제제재의

8) Robert O. Keohane, Joseph. S. Nye, *Power and Interdependence*, Longman, 1977.

9) David A. Baldwin, *Economic Statecraf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효과성을 검증하였다.¹⁰⁾ Pape는 Hufbauer와 Schott의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두 사람이 주장한 40개의 경제제재 성공사례에 있어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단 5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경제제재의 성공조건을 재정의 하고 있으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경제제재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¹¹⁾ Alexander George는 제재시행국의 강압전략 자체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강압의 강도에 따라 A, B, C타입으로 나누고 C타입인 제재대상국의 정권교체가 가장 이루기 힘든 목표라고 설명한다.¹²⁾ 이에 더하여 냉전이후의 경제제재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Martin은 1991년 냉전의 종식이후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경제제재의 효용성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¹³⁾

다음은 두 번째로 경제제재가 부과된 특정 사례에서 경제제재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다. 우선, Jentleson과 Whytock은 경제제재의 일반론과 더불어 제재국의 변수와 제재대상국의 변수를 사용하여 각 시기별로 미국의 대리비아 강압외교 전략과 그에 따른 리비아의 정치-경제적 변화를 그려냄으로서 미국의 대리비아 경제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분석하였다.¹⁴⁾ 하지만 그들은 Randall Newnham은 미국의 강압전략을 당근과 채찍으로 표현하고 이것이 리비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고 있는데 제재대상국인 리비아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¹⁵⁾ 하지만 그는 경제제재가 리비아에 준 영향만 분석하였

10) Gary Clyde Hufbauer, Jeffrey J. Schott, and Kimberly Ann Elliot,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History and Current Policy*, Washington D.C.: Institution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0., second edition.

11) Robert A. Pape, "Why Economic Sanctions Do Not Work", *International Security*, Vol. 22, No. 2, Fall, 1997.

12) Alexander L. George, "Coercive Diplomacy", *The Limits of Coercive Diplomacy*,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94.

13) Lisa L. Martin, *Coercive Cooperation: Explaining Multilateral Economic Sanc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14) Bruce W. Jentleson and Christopher A. Whytock, "Who "Won" Libya?: The Force-Diplomacy Debat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ory and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3, Winter 2005. 06.

15) Randall Newnham, "Carrots, Sticks, and Bombs: The End of Libya's WMD Program", *Mediterranean Quarterly*, Summer 2009.

고 외부적 변수 즉 국제환경의 변화를 외면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Marcus Noland는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경제적 영향력 분석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¹⁶⁾ Rennack은 핵을 포함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테러지원, 무기이전 등이 미국의 안보를 현저히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밝혀진 2002년 이후 악화된 북미관계를 서술하면서 북한의 위협행위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경제제재를 설명하고 있으며, 차후 대북제재 강화와 그에 관련된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¹⁷⁾ 이들 연구들의 특징은 미국이 자신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에게 경제제재를 시행함으로써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제재대상국으로 하여금 정책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특정 사례(주로 단일 사례)에서의 미국의 경제제재와 제재대상국의 변화를 그리는 연구가 많았는데 이와 같은 연구들의 한계는 제재시행국이나 제재대상국에 초점을 맞춰 분석함으로서 서술이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한편, 국내 연구진들이나 연구기관들도 미국의 경제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연구를 내놓았는데 주로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양운철의 경우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역사를 간략히 설명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경제제재가 가져오는 특정 변화의 언급 없이 변화양상만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¹⁸⁾ 다음으로 김상기는 대북경제제재의 유효성을 분석하며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유용하나 그 유용성이 경제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¹⁹⁾ 문순보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가 부과한 경제제재의 영향력을 잘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북한의 내부동학을 무시한 측면은 한계로 지적될 것이다.²⁰⁾ 정형곤 · 방

16) Marcus Noland, "The (Non) Impact of UN Sanctions on North Korea", Working Paper series, Peterson Institution for International Economics, December, 2008.

17) Rennack, D. E., "North Korea: Economic Sanc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2006.

18) 양운철,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원인, 과정, 전망』, 성남: 세종연구소, 2001.

19) 김상기, "대북경제제재의 유효성 분석: 실태와 효과", 『정책연구시리즈 2007-09』, 서울: 한국개발연구원(KDI), 2007. 09.

20) 문순보, "북핵문제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가전략』, 제16권 2호, 2010.

호경의 연구는 대북경제제재의 유효성을 Difference-in-Difference 기법을 사용하여 가장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앞선 김상기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분석영역이 경제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²¹⁾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경제제재에 대해 비교사례분석을 하는 연구들이 있다. Haass는 경제제재의 중국적인 목적이 정권교체임을 밝히고 북한과 이란을 사례로 선정하여 미국의 대북한, 대이란 정책을 고찰하고 이들 국가의 핵 포기를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제한된 군사적 행동, 외교, 경제적 압박이 이들 국가의 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파악하고 있다.²²⁾ 비교사례분석에서는 국내연구들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는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해외의 성공사례를 북한에 적용하여²³⁾ 북한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하는 시도로 보여 진다. 우선 조명철 · 김지연 · 홍익표는 핵 포기국가들의 사례를 점검하면서 미국의 경제제재와 이들 국가들의 정책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핵 포기국가들의 사례를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여주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²⁴⁾ 정영태 · 김연철 · 서상현의 연구는 리비아와 쿠바의 경제제재의 대응방식을 설명하고 이러한 경험이 북한에 주는 의의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제재대상국의 변화위주로 설명하여 경제제재의 영향력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²⁵⁾ 홍순식의 연구는 다른 연구자들과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는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를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국제상황과 제재대상국의 내부 상황도 설명하면서 리비아의 사례와 북한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지만 그는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리비아에 영향을 미치

21) Difference-in-Difference 기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형곤 · 방호경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효과분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pp. 26~27. 참조.

22) Richard N. Haass, "Regime Change and Its Limits", Foreign Affairs, Vol. 84, No. 4, July/August, 2005.

23) 조동준, "왜 핵무기를 포기할까", 한반도평화연구원, p14.

http://www.koreapeace.or.kr/modules/forum/forum_view.html?fl_no=380

24) 조명철 · 김지연 · 홍익표, 『핵 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개발 지원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25) 정영태, 김연철, 서상현,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리비아와 쿠바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7.

는 변수들의 기준을 달리함으로서 비교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한계를 보여준다.²⁶⁾

대부분의 기존의 연구에서는 경제제재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 뿐더러 제재대상국들의 내부적 요인을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 지지 않았거나 혹은 다루어 졌더라도 개략적인 설명에 그쳤던 제재대상국들의 정치·경제적 구조에 대한 비교를 통해 제재대상국들의 정책을 영향을 주는 요인을 추적한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을 두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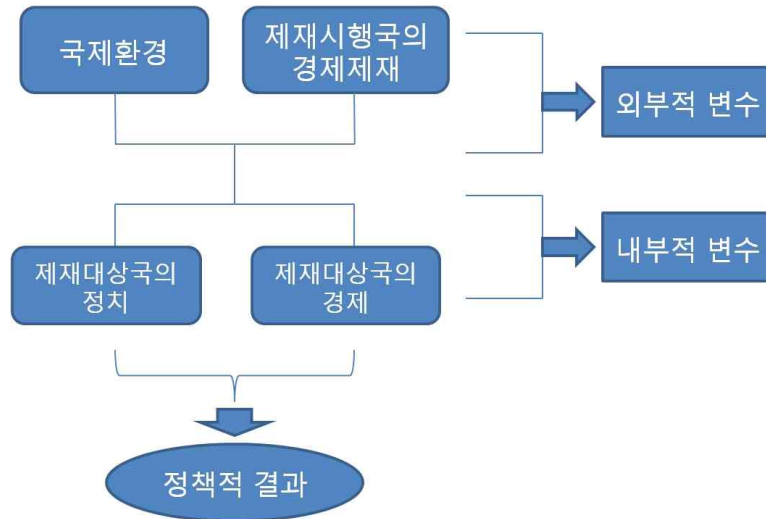
3. 연구 설계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제재가 제재대상국인 북한과 리비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한 국가의 주도로 다른 두 국가에게 경제제재를 부과하여 특정한 정책에서 두 국가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는 크게 두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첫 번째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두 국가에서 정책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부적 요인에 의해 정책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외부적 요인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 수 있는데 하나는 두 국가에게 부과된 경제제재 자체가 다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두 국가에게 부과된 경제제재에 두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참여도의 수준이 달랐다면 두 국가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도 다를 것이고 이는 정책의 차이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내부적 요인에 의해 정책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 국가가 똑같은 경제제재를 부과하였고 다른 국가와의 공조상황도 같다고 가정한다면 두 국가의 정치와 경제의 구조로 인해 정책적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26) 홍순식,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실패성: 리비아 사례와 비교”, 『東亞研究』, 第 53輯 2007, 08.

<그림 1-1> 논문의 변수 구조



본 연구에서 미국이 주도한 경제제재에 대한 북한과 리비아의 다른 정책적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변수구조는 위의 그림과 같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변수구조를 각각 검증하여 북한과 리비아의 정책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사례 및 시기의 선정

본 연구는 해외 국가의 경제제재로 인한 정책 변화를 경험한 국가들의 변화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핵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제재를 경험한 국가의 핵 프로그램의 폐기 사례를 선정하여 북한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해외 국가의 사례선정에는 몇 가지 사항들이 고려되었다. 우선 사례를 선정할 때 냉전이 종식된 이후 핵을 포기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냉전시기에 사회주의 국가들은 미국에 의해 거의 다 경제제재를 받았으나 냉전시기 미국의 경제제재는 실효성에 바탕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상징적 의미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례 군에서 경제제재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핵

을 포기한 국가들은 제외하였다. 경제제재를 받지 않고 핵을 포기할 경우 경제제재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991년 냉전종식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1993), 브라질(1994), 아르헨티나(1994), 카자흐스탄(1995), 우크라이나(1996), 벨로루시(1996), 그리고 리비아(2003)의 경우가 핵무기를 보유했다가 폐기하였다.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안보불안의 해소와 민주화 그리고 1993년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미국의 경제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해체하였고²⁷⁾, 핵물질의 수출입을 통제하는 쟁거위원회²⁸⁾에 가입하였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80년대에 핵개발을 추진하였으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양자 간의 합의로 핵개발을 포기하였다. 1994년에 중남미 비핵화 조약인 Tlateloco조약에 서명하게 되고, 1995년에는 아르헨티나가 이듬해에는 브라질이 NPT(Non Proliferation Treaty)에 가입한다.²⁹⁾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그리고 벨로루시의 경우 구 소련연방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면서 핵무기를 인도받았으나³⁰⁾ 미국과 구소련의 전략무기 감축협정(1991)규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해체에 합의하게 된다.³¹⁾

27) 조동준, “왜 핵무기를 포기할까”, 한반도평화연구원, p14. (검색일: 2012. 04. 05)

http://www.koreapeace.or.kr/modules/forum/forum_view.html?fl_no=380

28) 핵관련 물자 수출시 IAEA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출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로서, 1970년 NPT가 발효된 후 1971년 NPT 제3조 2항의 시행을 위해 ‘원자력수출국위원회(Nuclear Exporter's Committee)’가 구성되어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1974년 원자력 수출통제의 기본 규범에 합의함으로써 최초로 실질적인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체제가 마련되었다. 현재 모든 핵 보유국을 포함해 38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쟁거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zanggercommittee.org/Seiten/default.aspx> (검색일: 2012. 04. 05)

29) Velazquez, Arturo C. Sotomayor, "Civil-Military Affairs and Security Institutions in the Southern Cone: The Sources of Argentina-Brazilian Nuclear Cooperation",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Vol. 46, No. 4, Winter 2004, p29.

30) Potter, William C. "The Politics of Nuclear Renunciation: The Cases of Belarus, Kazakhstan, and Ukraine", The Henry L. Stimson Center. Occasional paper No. 22, April 1995.

31) 정형곤 · 나승권 · 박철형 “우크라이나 및 리비아 WMD(대량살상무기) 해체 사례와 북핵문제 해결에의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Vol. 7, No. 17, 2007.

<표 1-1> 핵개발을 시도하였다가 포기한 국가들

국가	핵개발 폐기년도	국가	핵개발 폐기년도
일본	1945	호주	1980년대*
노르웨이	1950년대*	유고슬라비아	1987
독일	1958	스위스	1988
스웨덴	1960년대*	루마니아	1989
캐나다	1969	남아프리카공화국	1991
인도네시아	1971	아르헨티나	1994
네덜란드	1975	브라질	1994
한국	1975	카자흐스탄	1995
이탈리아	1976	벨라루스	1996
대만	1977	우크라이나	1996
이집트	1981	리비아	2003

출처: 조명철 · 김지연 · 홍익표, 『핵 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개발 지원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을 바탕으로 본인 작성.

하지만 리비아의 경우 1982년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아왔으며 1986~89년 사이의 국제적인 테러행위로 인하여 1992년부터는 UN으로부터도 경제제재를 받아왔다. 이후 1996년 미국에서 ‘이란-리비아 제재법(ILSA)’이 통과되어 또 다시 경제제재를 받게 되었다. 리비아는 대내외적 안보위험에 대응하여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였고 테러행위로 인하여 오랜 기간 경제제재에 시달리다가 미국과 UN의 압박으로 인해 핵무기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앞선 사례들과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리비아와 북한은 ① 같은 사회주의체제로서 오랫동안 독재국가였다는 점 ② 테러혐의로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았다는 점 ③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점 ④ 90년대 들어 미국과 화해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가진다. 그러나 리비아가 2003년에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폐기하기로 미국과 합의를 이룬 것에 반해 북한은 여전히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기의 설정에 있어 리비아는 1982년부터, 북한은 1950년부터 미국의 제재가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기간의 차이는 양자 간의 비교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두 국가모두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이전에는 미국의 경제제재는 실질적으로 제재대상국의 경제에 손해를 끼치기 보다는 반 사회주의의 상징성이 강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공산주의에 대한 경제제재는 제외한다. 따라서 리비아는 테러혐의로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은 1982년부터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폐기를 선언한 2003년까지를 분석대상으로 산정하였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테러혐의로 경제제재를 받기 시작한 1988년부터 핵과 미사일문제를 두고 진퇴를 거듭하다 결국 핵 실험에 이르게 된 2006년까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지도자에 관해서는 리비아의 경우 1969년부터 2011년까지 카다피가 독재를 했지만 북한의 경우 분석기간인 1988년부터 1994년까지 김일성과 김정일 공동으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시기 김일성이 연로하여 실질적으로는 김정일이 북한의 실무적인 사항을 관장하였으므로 김일성 보다는 김정일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해나가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두 개의 사례를 비교하는 비교사례연구(Comparative Case Studies)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북한과 리비아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대외적 변수와 대내적 변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 후 정책적 차이를 가져온 요인들을 도출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문헌연구와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4) 자료

본 연구는 미국과 UN 경제제재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들을 활용할 것이다.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한자료로서 미국 법무부의 경제제재에 관한 목

적과 방법이 나온 근거법률의 내용, 제재대상국과 관련된 의회 보고서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의 경제제재를 보도한 각종 미디어 자료들(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Economist 등)을 활용하여 경제 제재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볼 것이다.

북한과 리비아에 관련된 자료들은 김정일 저작선집의 내용들(예를 들어 주체사상에 대하여 등)을 활용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김일성 저작선집에 수록된 내용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현지 지도를 하면서 남긴 말들은 로동신문에서 찾을 것이다. 하지만 로동신문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선신보를 비롯하여 해외언론의 보도 자료를 활용할 방침이다. 인터넷자료도 활용할 것인데 로동신문이나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³²⁾ 북한 경제부분에서는 북한 국내총생산량 관련 자료는 한국은행 자료와 UNDP자료를, 북한무역 관련 자료는 KOTRA 통계자료를, 북한경제 전반에 관해서는 통일부 북한개요와 World Bank의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리비아의 경우 카다피의 저서인 'Green Book'을 위주로 이데올로기에 대한 틀을 볼 것이며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리비아 관영언론인 JANA(Jamahiriya News Agency)사이트와 국영방송매체인 알-자마히리야(Al-Jamahiriya)사이트를 또한 카다피의 연설문 등이 있는 알-카다피(www.algathafi.org)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리비아가 언론의 자유가 없는 관계로 국내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보도가 안 될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리비아 국내정치를 다룬 보고서나 서방언론들의 기사들도 살펴보고자 한다. 리비아 경제와 관련해서는 리비아 중앙은행 사이트(<http://cbl.gov.ly/under/underconstruction.html>)를 활용할 것이며³³⁾ 리비아 석유와 관련해서는 석유수출기구(OPEC)의 자료를 보고자 한다.³⁴⁾ 또한 리비아 경제 전반적인 지표는 IMF, World Bank, UN의 자료를 검토할 것이다.

32) 2012년 1월까지의 로동신문 홈페이지나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를 프록시 서버를 이용하여 방문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프록시 서버 자체에서 차단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33) 리비아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카다피가 죽은 후에는 이 세 개의 사이트가 모두 폐쇄되었다.

34) OPEC, <http://www.opec.org/>

4.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해 북한과 리비아가 어떻게 대응을 하였으며 이러한 대응의 결과가 도출되었는지를 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양 국가의 정치·경제적 구조이다. 경제제재 이전에 양국가가 특정한 정치·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특정한 정치·경제의 구조가 경제제재라는 강압적 시도를 어떻게 받아들였고 또 경제제재를 받아 왜곡된 체제에서 정치·경제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양국의 지도자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고 그 결과 정책적 결과들이 발생하였으며 양국의 체제를 비교함으로써 정책적 차이의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본문의 첫 번째 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1절에서는 경제제재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을 통해 부과가 되며 경제제재로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논할 것이다. 그리고 2절에서는 1절에서 언급한 경제제재의 일반론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구체적인 실행에 옮겨지는지 북한과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통해 그 과정을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북한과 리비아에 부과되었던 미국의 경제제재의 역사적 맥락과 구체적인 실천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 3절에서는 미국의 경제제재들이 어떻게 북한과 리비아에게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해 양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였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본문의 두 번째 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설명한다. 이 장에서는 북한과 리비아가 왜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해 서로 다른 대응을 하게 된 원인을 찾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에 따른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미국 경제제재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실시한 경제제재가 북한과 리비아에게 얼마나 손해를 주었는가와 제재대상국과 긴밀한 교역관계를 보이던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의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제재대상국인 북한과 리비아의 정치·경제 구조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

는 양국의 정치 구조와 경제구조의 차이를 검토함으로서 북한과 리비아가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해 왜 특정한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맥락적 해답을 제공 하고자 한다.

마지막 장인 결론 부분에서는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과 리비아의 정치·경제의 구조가 그들의 정책적 차이를 만들어 내는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즉 앞서 설명한 북한과 리비아의 정치와 경제의 구조가 미국의 경제제재를 부과 받았을 때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정책 특히 행정책과 관련하여 이를 계속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인가 아니면 미국의 경제제재에 의해 자신들의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 구조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II. 미국의 경제제재와 북한과 리비아의 대응

본 장에서는 미국의 경제제재와 이에 따른 북한과 리비아의 대응을 다루고자 한다. 미국은 북한과 리비아를 “불량국가”로 지정하고 오랜 시간 경제제재를 시행해 왔다. 그리고 “불량국가”인 북한과 리비아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해 대응하였다. 미국의 경제제재는 북한과 리비아에게 완전히 동일하게 시행되지는 않았고 경제제재에 따른 북한과 리비아의 대응도 사뭇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북한과 리비아의 대응 방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절에서는 주로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우선 경제제재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제제재의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무엇 때문에 경제제재를 부과하는지에 대한 경제제재의 일반론에 관해 먼저 알아보고 이에 따라 북한과 리비아에게 어떠한 경제제재가 부과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절에서는 미국의 경제제재에 따른 북한과 리비아의 대응에 관해 설명하려고 한다. 북한과 리비아는 경제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두 국가의 대응에 관한 비교를 해보고자 한다.

1. 미국의 경제제재: 정의와 방법 그리고 목적

1) 경제제재의 정의

미국정부는 외교, 설득, 문화와 과학기술 교류 혹은 다른 친근한 방법들로 특정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했을 때 제재를 부과한다. 제재는 완전히 친하고 협력적인 관계와 완전히 적대적이고 전쟁도 불사하는 관계라는 양극단의 스펙트럼 상에서 중간부분에 위치하는데 제재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침해하거나, 테러를 지원하거나 기지를 제공하는 행위, 대량살상무기의 전파,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거나 미국의 안

보를 위협하는 국가나 단체에게 제재를 부과한다. 이러한 제재의 한 방법으로 널리 쓰이는 것이 경제제재인데 경제제재란 제재국가가 하나나 둘 이상의 특정국가그룹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또는 적어도 그들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내린 경제조치³⁵⁾로서 쉽게 말하자면 대상 국가가 국제적 규범을 따르도록 하는 강압적 수단으로서 무력을 사용하는 군사적 제재와는 달리 특정국가가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상국가에 대해 무역 · 자본 · 서비스 거래 등을 비롯한 국가 간 모든 경제활동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미국이 경제제재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50여 년 간 지속되어 왔던 미-소 냉전 때문이었다. 이는 두 강대국 간의 이념대립과 대치상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서로 다른 블록에 있는 국가들과 무역거래를 단절하는 방법으로 제재가 이루어져 왔다. 북한과 리비아도 사회주의 국가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경제제재를 받아왔다. 둘째는 냉전의 종식 이후 테러, 마약, 위폐,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및 보유 그리고 불량국가들 사이에 상호이전의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억제수단으로서 경제제재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9.11사태이후 미국이 위협을 느끼는 이슈는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및 보유 그리고 불량국가들 간의 무기상호이전의 우려이다. 하지만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 매우 위험하다고 인식하나 우방국의 핵확산과 적대국의 핵확산을 구별한다. 미국이 우려하는 바는 적대국의 핵확산인데 이는 미국이 지정한 소위 불량국가들이 핵무장 통해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인데 이러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제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³⁶⁾

2) 경제제재의 방법

경제제재의 방법은 부과하는 주체 수에 따라 그리고 부과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부과하는 주체 수에 따라 분류를 한다

35) Rennack, D. E., and Shuey, R. D., "Economic Sanctions to Achieve Foreign Policy Goals: Discussion and Guide to current Law," CRS Report for congress, 97-949 F. 1998, p2.

36) 홍순식,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실효성: 리비아 사례와 비교", 『東亞研究』, 第 53輯 2007, 08. pp. 507~508.

면 ‘다자적 경제제재(multilateral economic sanction)’과 ‘일방적 경제제재(unilateral sanction)’로 나뉜다. ‘다자적 경제제재’는 말 그대로 한 국가만이 경제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개는 국제기구의 다수의 참여 주체들에 의해 제재를 결정하고 이를 부과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을 내어 UN 회원국 모두에게 제재에 참여할 것을 결정하거나 권고하는 것이 있다.³⁷⁾ 1992년과 1993년에 테러행위로 인하여 리비아에게 적용하도록 결정된 UN 안보리 결의안748호, 883호와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과 10월 핵무기 실험 이후 결정된 UN 안보리 결의안 1695호의 경우³⁸⁾가 이에 해당한다.

‘일방적 경제제재’는 한 국가가 특정국가에게 경제제재를 부과할 때 다른 국가의 참여가 없는 것을 의미하며 대개는 한 국가가 UN의 참여 없이 개별적으로 그리고 자체적으로 특정국가에게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일본은 2003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감행 및 일본인 납치문제와 병행하여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추진하였고, 2006년 미국은 ‘핵확산금지법’을 통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개인에 대해 미국 정부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시키는 제재를 부과한 경우가 ‘일방적 경제제재’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부과 형태에 따라서도 경제제재를 나눌 수 있는데 이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수출입을 통한 무역관계의 금지를 들 수 있다. 이에 근거가 되는 법규로는 수출규제법(Export Control Act),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무역협정연장법(Trade

37) 이지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와 ‘해제프로세스’ 전망: 리비아와 베트남 사례가 주는 시사점』, 석사학위 논문, 북한대학원대학교, 2008, p8.

38) 2006년의 UN결의안 1695호의 경우는 ‘다자적 경제제재’의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하나 미국이 주도적으로 자국의 외교정책과 법을 어긴 북한에 대한 징벌로서 UN에게 조치를 요청하였다. 이는 기존에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정책에 동참하지 않던 중국과 러시아가 이례적으로 반대표를 던지지 않아 북한에 대한 UN의 경제제재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의 UN 결의안 채택은 직접적으로 리비아의 테러에 의해 피해를 입은 EU 회원국들이 리비아의 테러에 대해 UN 결의안을 낸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리비아 경우는 미국의 대리비아 경제제재의 부과와 해제 그리고 UN의 대리비아 경제제재의 부과와 해제를 동시에 보려고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큰 틀에서 UN의 대북한 경제제재 부과와 해제를 미국의 경제제재 부과와 해제로 간주하고 볼 것이다.

Agreement Extension Act), 통상법(Trade Act),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등이 있다. 이러한 법규들은 경제제재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의 교역을 방해하거나 금지함으로써 제재대상 국가들에게 피해를 준다. 만약 제재대상국이 석유를 비롯한 지하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자원들의 수출의 비중이 높은 국가라면 위에서 열거한 법들로 인해 수출의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고 따라서 무역관계의 금지라는 제재는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하지만 제재대상국의 주요 수입원이 지하자원의 수출이 아닌 경우라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또한 수입의 측면에서 제재대상국이 제재시행국의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재대상국에 대한 무역관계의 금지는 상당한 효과를 가져 올수 있지만 만약 제재대상국이 또 다른 수입원을 찾게 된다면 이 제재는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³⁹⁾

둘째는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상품거래 및 무기거래의 금지 형태의 제재이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법규로는 국제무기거래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 애국법(Patriot Act), 핵확산방지법(Nuclear Proliferation Prevention Act)에서는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수단을 차단하기 위해 자동차나 트럭 같은 무관한 품목도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생화학무기통제 및 전쟁배제법(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Control and Warfare Elimination Act)도 같은 형태인데 이법에서는 대외원조의 중지, 군사물자 구입 시 신용공여중지, 미국이 통제하는 특정물품의 수출금지,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중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⁴⁰⁾ 이러한 법규들은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개발의 원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과 이미 개발된 대량살상무기의 거래를 방지함으로써 테러집단이나 불량국가에게 무기가 이전되지 않도록 한다. 이는 9/11 이후에 더욱 강화되었는데 2003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벌어진 전쟁에서도 미국의 대량살상무기와 테러에 대해 어떤 시각을

39) 홍순식,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실효성: 리비아 사례와 비교”, 『東亞研究』, 第 53輯 2007, 08. pp. 511~512.

40) U.S. Information Agency, "Overview of U.S. Export Control Act", Economic Perspectives, *An Electronic Journal of the U.S. Information Agency*, Vol. 2. No. 4, 1997. 09. p15.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증명한다.

셋째는 불량국가에 대한 대외원조제공금지를 들 수 있는데 이를 규정한 법규는 대표적으로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이 있다. 대외원조법은 냉전시기부터 오늘날까지 미국의 유인수단으로 활용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후 폐해가 된 서유럽을 복구하기 위한 경제지원을 실시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냉전의 종식이후에는 구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에 대해 대외원조를 실시하였는데 대부분은 소련의 핵무기 해체 등을 위해 사용되었다. 미국은 과거에 적국이었던 이들에게 대외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의 민주주의를 촉진한다는 명분을 갖게 되었다. 또한 적대적 관계가 아닐 경우 미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해 수출과 투자를 지원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수출입은행(Exim: Export-Import Bank)과 상품신용공사(CCC: Commodity Credit Corporation)의 공식적인 수출신용 제공,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Office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의 투자보험과 보증 제공 그리고 무역개발국(TDA: Trade Development Agency)의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제공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원조들은 미국의 국익에 맞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데 주지하다시피 불량국가에게는 이러한 원조들이 제공되지 않는다.⁴¹⁾ 엄밀히 논하자면 세 번째 방식은 앞서 언급한 두 종류의 경제제재와 달리 경제적 인센티브의 금지인데 제재를 받는 국가들에게는 원조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의 상실도 일종의 경제제재라고 볼 수 있다.

3) 경제제재의 목적

앞의 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제재는 경제적 방법을 활용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제재를 통해서 제재대상국의 정책을 변화시키거나 제재시행국의 입장을 관철시키며, 잠재적인 정책이나 행위를 저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제재 자체는 경제적이지만 그 목적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볼 수 있다.⁴²⁾ 이러한 경제제재에는 세 가지

41) 홍순식,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실효성: 리비아 사례와 비교”, 『東亞研究』, 第 53輯 2007, 08, pp.512~513.

전제가 내포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제재시행국은 제재대상국보다 국력이 강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제제재를 분석해 본다면 미국이나 유럽 연합이 비민주적이고 소위 말하는 불량국가에게 경제제재를 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로는 UN차원에서도 경제제재를 부과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도 미국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몇몇 강대국들의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 두 번째는 각종 경제적인 수단이 동원된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 무역, 투자, 원조 등의 각종 분야에서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경제제재의 상당수는 수출입을 봉쇄하는 것인데 때문에 제재대상국가의 지배층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피해를 입힌다. 세 번째는 두 번째 전제와 연결되어 나타나는데 일반국민에게 까지 피해가 발생함으로서 불만을 가중시키고 이는 지배층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겨준다. 제재시행국은 이러한 정치적 부담을 유발시켜 제재대상국의 정책변화를 유도한다. 하지만 부작용도 발생하는데 우선 경제제재를 통해 정책적 변화 혹은 정치적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 경제제재는 상징적인 수단에 그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게 된다. 또한 경제제재를 시행하게 되면 제재대상국의 경제도 피해를 발생시키지만 제재시행국의 경제도 피해를 입게 된다. 미국의 경우 경제제재로 인해 매년 150~190억 달러 어치의 수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부문에서는 약 20만 명이 고용기회를 잃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⁴³⁾

이와 같은 부작용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제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하스(Haass)는 경제제재의 목적을 “경제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정치적 · 군사적 행위를 처벌을 통해 정치적 · 군사적 행위를 변화시키려고 도입되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그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완만할지라도 지속적인 경제제재를 시행함으로써 구소련의 몰락을 가져왔던 것처럼 ‘지속적인 경제제재활동’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⁴⁴⁾ 아

42) 김상기, “대북경제제재의 유효성 분석: 실태와 효과”, 『정책연구시리즈 2007-09』, 한국개발연구원(KDI), 2007. 09. pp. 9~10.

43) 윤충원, “미국의 경제제재법규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 1호, 2004. 06. p101.

44) Haass, "Economic Sanctions: Too Much of a Bad Thing", Policy Brief #34. Washington: Brookings Institution. 1998. 06.

스카리는 경제제재의 목적을 여러 가지로 구별하는데 첫째 제재대상국의 정책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둘째 제재대상국에 큰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대상국의 정책이나 행동에 대한 불만족의 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셋째 제재대상국의 정책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단지 손해를 입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넷째 제재시행국 즉, 자국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나누고 있다.⁴⁵⁾ 젠틀슨은 경제제재의 목적으로서 ‘갈등’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경제제재가 갈등예방, 갈등해결 그리고 갈등관리를 통해 갈등을 억제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⁴⁶⁾ 이와 같이 경제제재의 목적은 안보, 대외정책, 무역 분쟁, 갈등관리 등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고 때로는 경제제재의 목적자체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으며 하나 이상의 목적을 가진 경우도 있고, 제재의 진행과정 중에 목표가 변경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종합해본다면 경제제재의 목적은 불분명하고 복수목표를 가질 수도 있지만 제재대상국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고 정책변화를 유도함으로서 그것이 대외관계와 관련이 있던, 자국의 안보와 관련이 있던, 경제적 이득에 관련이 있던 지에 상관없이 제재시행국의 이익을 확대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북한과 리비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1)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는 6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3일 후인 1950년 6월 28일 미국은 수출통제법(Export Control Act)을 발동하여 대북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다. 같은 해 12월 중공군이 북한을 돕기 위해 참전하자 트루먼 대통령은 ‘국가비상’을 선포하고 북한에 대해 ‘적성국교역법’을 적용하게 된다. 이법의 적용

45) Hossein Askari and John Forrer, "Measuring Vulnerability to U.S. Foreign Economic Sanctions", *Business Economics*, April 2005, pp.41~48.

46) Jentleson Bruce W. "Economic Sanction and Post-Cold War Conflicts: Challenges for Theory and Policy", *International Conflict Resolution: After the Cold War*, Washington D. C.: National Academy Press 2000, p127.

으로 북한은 이미 부과 받고 있던 경제제재에 더하여 추가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데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신설되어 해외자산통제 규정(FACR)을 공포함에 따라 북한은 무역금수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이듬해인 1951년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국가들에게 최혜국대우(MFN)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역협정연장법’⁴⁷⁾을 발효시킨다. 1961년에는 경제원조와 신용제공 등의 대외원조를 규정하는 ‘대외원조법’이 통과되었는데 이 역시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권 국가들에게는 인도적 차원의 원조를 제외하고 미국의 대외원조가 금지되었다. 냉전 시기의 미국의 對북한 경제제재를 살펴보면 북한의 특정행위 때문에 이에 대한 징벌이나 불만의 표시로 경제제재를 했다가 보다는 단지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라서 차별하는 형태의 경제제재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냉전기 미국은 북한의 특정행위로 인해 자신들의 이익에 손해가 가거나 안보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공산주의를 봉쇄하고 배제하려는 차원에서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에게 경제제재를 부과한 것이었던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조차 자신들의 주요한 대외교역 파트너는 공산주의권 국가들이었고 굳이 미국이나 기타 서방세계와 무역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공산주의블록 내에서 무역을 비롯한 실물과 금융이 이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의 對북한 경제제재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다. 한마디로 초창기 미국의 對북한 경제제재는 냉전의 산물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갖지 못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공산주의에 대한 경제봉쇄와는 별도로 미국은 1978년 3월에 핵확산방지법을 통과시켜 핵원료나 설비, 기술 등을 핵 무기 비 보유국에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1979년에는 군수품이 아닌 사적으로 이뤄지는 상품의 수출에 대해 특정 물품과 기술의 수출에 관해 규정한 ‘수출관리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으로 인해 미국대통령은 특정물품과 특정기술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냉전 시기 미국의 공산주의 진영에 대한 수출통제의 영향권 안에 있던 북한은 미국이 수출관

47) 무역협정연장법은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권 국가와 거래할 때 최혜국대우를 부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산주의권 국가들로 부터의 수입품에는 최고관세를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리법에 ‘테러지원국 지정’ 조항을 신설하면서 ‘대테러와 비확산 정책’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 1987년 11월 북한은 KAL기를 폭파시켰고 이 일로 인해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었고 새로운 경제제재를 받게 되었다.⁴⁸⁾ 또한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및 보유 그리고 불량국가 사이의 이전명목으로도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았는데 북한은 1980년대부터 이란을 비롯한 불량국가들에게 각 종 미사일을 공급하였으며 이 때문에 북한은 핵확산금지법에 따라 미국의 불법무기 비확산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된다.

<표 2-1> 80년대 이후 북한의 미사일 수출 현황

수신국	숫자	미사일 분류	종류	주문년도	배송년도	배송된 수
이란	4000	스커드B / AT-3	대전차 미사일	1986	1986-1988	4000
우간다	100	Strela-2 / SA-7	SSM	1987	1987	100
리비아	5	스커드C	SSM	1995	1999	5
파키스탄	2	로동	SSM	1993	1996-1997	2
시리아	150	스커드C	SSM	1990	1991-1996	150
베트남	100	SA-16	Portable SAM	1996	1996-1997	25 (불분명)
예멘	45	스커드C	SSM	1994	2001-2002	45
이란	170	스커드C	SSM	1990	1991-1993	170
시리아	25	스커드D	SSM	1996	2000-2004	25

출처: SIPRI arms trade database.

48)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에 의거하여 수출입은행기금 대여금지, 대외원조금지 조치를 받았고 국제금융기관법(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ct)에 의거하여 국제금융기관의 지원 금지조치를 받았다. Rennack, D. E., "North Korea: Economic Sanc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2006. 10. 17, p11.

그러나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는 소련이 붕괴된 이후 즉 냉전이 종식된 이후 본격적인 실효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북한이 더 이상 소련으로부터 경제-군사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데서 기인한다. 또한 소련을 위시한 공산주의 블록이 한꺼번에 붕괴되면서 북한의 심리적, 물리적 안전판이 붕괴되었다. 즉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무너지게 되면서 국제적으로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⁴⁹⁾ 북한이 이에 편승하지 못함에 따라 대외무역에 있어 기존의 시장을 잃게 되었고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더욱 고립되게 된다. 다음의 표는 80년대 이후 미국과 UN의 북한에 대한 주요 경제제재⁵⁰⁾를 보여준다.

<표 2-2> 80년대 이후 미국과 UN의 주요 대북한 경제제재의 내용

제재주체	법적근거(제재년도)	제재의 내용
미국	수출입은행령(1986) The American Import and Export Bank Regulation	- 미국 수출입은행의 대북한 여신제공 금지
미국	수출관리법(1988) Export Administration Act	- 북한에 대한 무역, 대외원조, 수출입 은행의 여신제공 금지 등 경제제재를 포괄적으로 확인 - 국제기관의 대북한 원조제공 시 반대
미국	국제무기거래규정(1988)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	- 국제테러 지원국인 북한과의 방산물자 및 관련 용역 판매 및 수출입 금지
미국	국제금융기관법(1988)	- 인권침해국가나 테러지원국은 국제

49) Lisa L. Martin, *Coercive Cooperation: Explaining Multilateral Economic Sanc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5.

50) 표에 나와 있다시피 공산주의와 관련한 경제제재는 빠져있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냉전시기의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고 또한 냉전의 산물로서 상징적 의미가 강했을 뿐 그 이상의 의미는 갖지 못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시켰다.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Act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금융지원 및 기술지원의 연장을 반대.(KAL기 폭파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
미국	무기수출통제법(1992) Arms Export Control La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수통제품목에 있는 물품의 수출 금지 및 2년 간 미국정부와의 계약 금지 - 미사일, 전자, 우주항공, 군용기의 생산 제조와 관련된 북한의 활동금지
미국	핵확산금지법(2006) Nuclear-Non Proliferation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되어 있는 국가와 거래하는 기업, 개인에 대해 미국 정부 모든 거래 중단(수출입 허가나 군수물자 계약을 전면 금지) -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도 관련국과의 거래정황 포착되면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음
UN	안보리결의안 제1695호 (2006. 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게 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된 모든 조치 즉각 중단 요구 - 유엔회원국들의 북한행동 감시 - 미사일 제조와 관련한 제품, 재료, 기술 등의 북한이전 금지
UN	안보리결의안 제1718호 (2006.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관련 품목 수출금지 -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관련 안보리 또는 제재위원회가 지정한 개인, 단체 등에 대여한 자금지원, 금융거래 금지
UN	안보리결의안 제1874호 (2009. 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회원국들의 북한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무기 및 관련 물자 이전, 수출 금지 - 공해상에서 북한행 의심선박 검색 -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프로그램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금지

출처: 조명철 · 김지연 · 홍익표, 『핵 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개발

지원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 홍순식,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실효성: 리비아 사례와 비교”, 『東亞研究』, 第 53輯 2007, 08. ; Rennack. D. E., "North Korea: Economic Sanc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2006. 10. 17.을 토대로 작성.

<표 2-2>에서 드러나듯 냉전 이후의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는 무기의 불법이전과 핵확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은 2000년대 들어 경제제재가 자국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각 국에 대해 경제제재를 완화해주었고 북한도 2000년 6월부터 미국과 교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양국 간에 여행도 가능하게 되었다.⁵¹⁾ 하지만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강경한 자세를 취하게 되었고, 2006년 지하핵실험과 대포동미사일 발사 이후에는 미국과 함께 UN도 북한의 경제제재에 동참하게 되었다.

2)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

리비아는 1969년 카다피가 쿠데타를 통해 최고 지도자가 되면서부터 미국과의 마찰이 시작되었다. 카다피는 국가정책 기조로서 반제국주의, 아랍주의, 사회주의를 들고 나왔고 친 소련정책과 팔레스타인지원으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는 악화 되었다. 또한 1972년 뮌헨 올림픽에 출전한 이스라엘 선수들과 1973년 수단의 미국대사 암살사건의 배후로 리비아가 지목되어 오면서 리비아에 대한 미국이 느끼는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그러던 중 1980년대 보수적인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양국의 관계는 기존의 감정적 대응에서 물리적 대응으로 수위가 높아졌다. 레이건 행정부는 1981년 5월에 워싱턴 주재 리비아 외교공관을 폐쇄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미국인과 미국기업의 리비아 여행금지조치를 내렸다. 그리고 1979년 개정된 수출관리법으로 인해 리비아는 1982년부터 이라크, 시리아, 남예멘 등과 함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서 미국은 리비아산 석유수입을 금지 및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상

51) 2000년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는 해외자산통국이 해외자산통제규정을 수정하여 나온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C. F. R. Part 500 § 500, 586 참조. 전자연방규정법규 홈페이지 http://ecfr.gpoaccess.gov/cgi/t/text/text-idx?c=ecfr&tpl=/ecfrbrowse/Title16/16cfr500_main_02.tpl

품의 리비아 수출이 금지되었다. 1986년 1월 레이건 행정부는 국가비상 경제권법(IEEPA)에 의거하여 리비아에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을 선포하고 일련의 행정명령들을 내리게 된다. 1월 7일 내려진 집행명령 12543은⁵²⁾ 리비아에 대한 상품·기술·서비스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미국시민의 리비아 여행관련 거래 또는 리비아 내에서 그들의 활동과 관련된 거래 금지, 리비아 정부에 대해 신용과 차관이 금지 등 수출입과 관련한 명령이었다. 다음날인 1월 8일에는 집행명령 12544⁵³⁾를 내렸는데 이는 미국 내 모든 리비아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였다. 이에 리비아는 86~89년에 걸쳐 테러를 감행하게 되고 일련의 테러들로 인해 리비아는 미국과 UN으로부터 본격적인 경제제재를 받게 된다.

<표 2-3> 80년대 이후 미국과 UN의 주요 대리비아 경제제재의 내용

제재주체	법적근거	제재의 내용
미국	수출관리법(1979) Export Administration Act (1982년부터 시행)	- 리비아산 원유수입 금지 -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한 미국상품의 리비아수출금지
미국	국제적비상경제권법 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1986년 1월)	- 미국 내 리비아 자산동결 - 리비아와의 모든 상거래의 중단
UN	안보리 결의안 748호 1차 경제제재(1992년 4월) (항공 및 무기금수)	- UN안보리제재위원회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Committee)의 승인을 받지 못한 모든 항공기의 리비아 이착륙 금지 - 항공기 관련 부품의 수출입 금지

52) 집행명령과 관련해서는 Federal Register 홈페이지를 참조
<https://www.federalregister.gov/articles/search?commit=Go&conditions%5Bterm%5D=12543&conditions%5Btype%5D=PRESDOCU>

53) 집행명령12544
<https://www.federalregister.gov/articles/search?commit=Go&conditions%5Bterm%5D=12544&conditions%5Btype%5D=PRESDOC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비아 항공사의 해외지점 폐쇄 - 모든 무기류(병기·군사용 운송수단 · 경찰용 장비 등)의 수출입 금지 - 외국 군사전문가의 군사기술 전수 금지
UN	안보리 결의안 883호 2차 경제제재(1993년 11월) (리비아의 국제적 고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거주 리비아 외교관 감축 및 이들의 활동제한 - 투자자금·증권·배당이자 등 리비아 정부 및 기업의 해외금융자산 동결(단 1993년 12월 이후 원유·천연가스, 석유제품 및 농산물 판매로 발생한 소득은 제외) - 원유정제 및 원유수송 관련 장비의 수출입금지(단 리비아에서 필요로 하는 원유채굴 장비는 제외)
미국	이란-리비아 제재법 ⁵⁴⁾ (1996)(Iran-Libya Sanctions Act: IL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4,0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미 금융기관의 지원 중단 - 미국정부 구매 프로젝트에의 참여 금지 - 관련회사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

출처: 박영호, 『리비아 경제제재 해제와 건설시장 확대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03. ; 조명철 · 김지연 · 홍익표, 『핵 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개발 지원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 Christopher M. Blanchard, Jim Zanotti, "Libya: Background and U.S. Rela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2011. 02. 11.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리비아는 1980년대 중반에 일어난 세 가지 사건으로 인해 미국과 UN에게 본격적으로 경제제재를 받게 된다. 첫 번째 사건은 리비아가

54) 이란-리비아 제재법은 2001년 한 차례 연장된다. 그리고 리비아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 상한선도 기존의 4,0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로 축소된다.

1986년 독일 베를린에 있는 디스코텍을 폭파하여 미국인 사상자를 발생시킨 것이다. 이 사건에 리비아가 개입한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미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뱅가지와 트리폴리를 폭격한다. 두 번째 사건은 1988년 팬암항공기 폭파사건인데 리비아는 스코틀랜드의 로커비 상공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팬암103항공기를 폭파시켜 항공기 탑승자 244명이 사망하고 마을 주민 11명도 사망한 것이다.⁵⁵⁾ 세 번째 사건은 1989년에 일어났는데 1989년 9월에 프랑스 항공사소속 UTA 772항공기가 서아프리카 니제르 상공에서 폭탄 테러로 인해 공중에서 폭파되었고 미국인을 포함한 승객 171명이 사망하였다. 프랑스는 이사건의 배후자로 4명의 리비아인을 기소하였다. 리비아는 1986년에서 1989년에 벌여졌던 일련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1992년 유엔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게 된다.⁵⁶⁾

UN이 리비아에 대한 제재를 취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팬암항공기 폭파사건에 있다. 미국과 영국은 팬암항공기의 테러 용의자들을 기소하였지만 카다피가 서방측의 사건규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리비아의 사건연루를 전면 부정하고 항공기 테러용의자 신병인도를 강하게 거부하였다. 이 때문에 UN은 1992년과 1993년에 안보리회의를 열어 안보리결의안 748호와 883호를 각각 통과시키기에 이른다.⁵⁷⁾ 결의안 748호는 리비아 항공기의 이착륙금지, 항공기 관련 부품의 수출입 금지, 리비아와의 외교관계 축소, 테러행위에 가담하는 리비아 사람들에 대한 입국 거부 및 강제추방조치 등이 포함되었고⁵⁸⁾ 결의안 883호는 리비아 아랍항공 사무소 폐쇄, 리비아 아랍항공사와 관련된 상업적 교류행위 금지,

55) Christopher M. Blanchard, Jim Zanotti, "Libya: Background and U.S. Rela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2011. 02. 11. pp.8~9.

56) Bruce W. Jentleson and Christopher A. Whytock, "Who "Won" Libya?: The Force-Diplomacy Debat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ory and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3, Winter 2005. 06. p59.

57) UN은 1992년 1월에 안보리결의안 731호도 채택하였다. 하지만 731호는 팬암기 폭파사건 비난 및 테러행위의 중단을 촉구한 것이기 때문에 제재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보리 결의안 731호는 UN의 제재에서 제외하였다.

58) UN웹사이트 <http://www.un.org/documents/sc/res/1992/scres92.htm>에서 볼 수 있으며 748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http://daccess-dds-ny.un.org/doc/RESOLUTION/GEN/NR0/011/07/IMG/NR001107.pdf?OpenElement>

리비아 공항보수와 개선에 필요한 물품이나 기술지원 금지, 리비아 항공기를 위한 보험 재계약 금지, 정부 및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리비아의 해외자산 동결, 원유 및 가스부문에서의 정제 및 수송 관련 장비의 수출입 금지 등이 포함되었다.⁵⁹⁾ 하지만 UN의 이 같은 경제제재는 석유와 천연가스개발 개발 저지 또는 석유판매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리비아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는 못하였다.

UN의 제재가 리비아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지 못하자 미국은 1996년에 이란-리비아제재법(ILSA)을 제정하게 된다. 이 법은 미국의 상원의원인 다마토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서 이란과 리비아의 석유 및 천연가스개발을 저지함으로서 양국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주요내용은 이란과 리비아의 석유 및 가스분야에 국적을 불문하고 연간 4,0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미국 금융기관의 지원중단, 제재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해 미국 수출입은행의 신용거래 연장조치 금지, 미국의 이중용도 기술을 구하는 제재대상 기업에 수출 라이선스 발급 거부, 제재대상 기업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1,000만 달러 이상의 신용거래 또는 대출 금지 등이 포함된다.⁶⁰⁾ 이란-리비아제재법이 발동하면서 리비아 경제는 성장 동력이 급격하게 둔화되었지만 이법으로 인해 독일과 프랑스가 리비아 석유사업에 참여를 저지당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EU는 미국의 이란-리비아 제재법이 자유무역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하기도 하였으며, 프랑스는 反이란-리비아제재법에 해당되는 反다마토법(Anti-Damato Law)의 입법을 추진하기도 하였다.⁶¹⁾ 하지만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01년 만료 예정인 이란-리비아 제재법을 한차례 연장시켜 리비아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게 된다.

한편 미국 항공기 폭파사건에 연루된 2명의 리비아인 용의자 인도를 거부해오던 카다피는 1999년 4월 네덜란드에서 스코틀랜드 법에 따라

59) 883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N93/626/78/PDF/N9362678.pdf?OpenElement>

60) Iran and Libya Sanctions Act of 1996: Title 50 U. S. C. § 1701

61) 박영호, 『리비아 경제제재 해제와 건설시장 확대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03. pp.22~23.

재판을 받게 한다는 조건으로 리비아인 용의자 2명을 네덜란드 헤이그에 인도하게 되고 같은 달 UN의 경제제재조치도 잠정적으로 정지되었다.⁶²⁾ 또한 2003년 12월에는 카다피가 리비아의 전격적인 대량살상무기(WMD)개발 계획을 포기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관련 시설에 대해 불시사찰을 허용한다는 선언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4년 1월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과 미국의회 대표단이 리비아를 공식 방문하였으며 2004년 2월에는 1982년부터 금지되었던 미국인의 리비아 여행이 허용되었고 같은 해 4월에는 이란-리비아 제재법이 철폐되었다.

리비아에 대한 미국과 UN의 경제제재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석유의 생산·판매 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리비아의 테러행위로 인해 미국의 주도로 시작된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미국 내에서의 많은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⁶³⁾ 2003년까지 계속되었다.

3) 양국에 대한 미국 경제제재의 특징

북한과 리비아는 공통적으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경제제재를 받았다. 일단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포괄적 경제제재 무역, 금융, 원조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이는 북한과 리비아가 공통적으로 받게 된 제재이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과 리비아에게 완전히 동일한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다. 북한의 경우 포괄적 제재만 확인하였지만 리비아에게는 리비아 산 석유 수입금지와 미국 내 리비아 자산동결이라는 맞춤형 경제제재를 부과했던 것이다. 하지만 80년대 미국의 대북한, 대리비아 경제제재는 경제적으로 큰 실효성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북한과 리비아의 주요 교역

62) 2003년 8월 영국의 중재아래 리비아 정부와 로커비 사건 유가족 단체와의 보상금 합의가 이루어 졌는데 그 조건은 유가족 1인당 1천만 달러로 정하고 UN의 경제제재가 해제될 경우 400만 달러, 미국 경제제재가 해제될 경우 400만 달러, 그리고 미국이 리비아를 테러지정국가로부터 해제할 경우 2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Christopher M. Blanchard, Jim Zanotti, "Libya: Background and U.S. Rela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2011. 02. 11. pp. 10~11.

63) 반 경제제재 여론은 미국의 단독 제재조치가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의 리비아 진출을 사실상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리비아정부를 약화시키겠다는 당초의 취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기업들의 진출기회만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IE)에 따르면 미국의 단독적인 경제제재조치로 인해 미국의 기업들이 150억~200억 달러의 시장상실효과를 입었으며 약 20만 개의 일자리가 상실되었다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박영호, 『리비아 경제제재 해제와 건설시장 확대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03. p25.

상대국 중에 미국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에서도 북한은 주로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과, 리비아는 유럽 국가들과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 시기의 미국의 경제제재는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90년대부터는 북한과 리비아의 경제제재가 조금씩 달라진다. 북한의 경우 불법무기 거래 정황이 포착되면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는 포괄적 제재의 바탕위에 미사일 통제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고 리비아는 폭탄테러 사건의 용의자를 UN측에 넘겨주지 않아 UN차원에서 경제제재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북한과 리비아의 경제제재의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UN은 리비아에 대해 항공기 이착륙금지와 오일관련 장비의 수출입을 금지 시켰다. 이후 미국은 단독으로 이란-리비아 제재법(ILSA)을 리비아에게 적용시켰고 리비아에 4,000만 달러 이상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미국이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에 대한 압박으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해 제재⁶⁴⁾를 가했고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UN차원에서 안보리 결의안1695호, 1718호를 발효하여 핵을 비롯한 미사일과 모든 무기종류의 북한 수출입을 금지시키고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 등이 금지되었다. 리비아의 경우는 1999년 로커비 사건의 용의자를 UN에 이송하면서 UN차원의 제재는 99년에 잠정 중단되었다. 하지만 2001년 미국이 이란-리비아 제재법을 연장하면서 리비아의 석유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을 이란과 같은 2,000만 달러로 낮추면서 리비아에 대해 더욱 압박을 가하였다. 종합해본다면 미국과 UN의 경제제재는 북한과 리비아 모두 포괄적 경제제재를 기본으로 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대량살상무기나 미사일, 그리고 무기이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리비아에 대해서는 석유산업 봉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4)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아니었다. 2005년 미국은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위조지폐 발행 및 돈 세탁, 그리고 불법 거래를 행해온 북한당국과 금융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애국법 311조의 적용대상으로 지목했다. 이 때문에 이 은행에 있는 북한계좌가 모조리 동결되었다. 윤영관,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정치경제”, 서울대학교 2010년 통일학 기초연구 심포지움 발표논문, 2010., p5.

3. 미국 경제제재에 대한 양국의 대응

1) 북한: 돌격대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자

(1) 정치적 변화와 대응

북한은 1990년대 초, 중반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겪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에는 90년대 초의 소비에트 블록의 몰락과 94년부터 있었던 자연재해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 있었던 미국의 경제제재도 이에 더하여 북한경제 위기에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하였다.⁶⁵⁾ 그러나 미국의 경제제재가 북한의 경제에는 악영향을 주었지만 정치 분야에서는 오히려 북한이 식량난과 에너지난에 있어 경제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선 90년대 초 · 중반 북한은 식량사정의 악화와 저조한 외자유치 실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이에 따른 정치적 불안을 붉은기 정신, ‘고난의 행군’ 등의 사상 강화운동과 유훈통치로서 억제해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의 책임을 미국의 경제제재 탓으로 돌려 정치적 통합을 이끌어 냈는데 북한의 경제난이 발생한 근본적 이유는 바로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이라는 것이다.⁶⁶⁾ 또한 북한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함으로써 미국이 주도해온 핵확산 통제정책에 제동을 걸게 되고 결국 1994년 원자료와 중유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10월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낸다. 북한은 90년대 초 · 중반의 위기를 대내적으로는 경제제재를 사용하여 무마시키고 대외적으로는 모험주의를 채택하여 미국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전략적 선택을 하였다.

1998년 9월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어 명실상부한 북한의

65)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적 변화와 대응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66) “오늘 우리인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그릇된 대 조선정책 때문이다. 미국은 군사적 공갈로 우리를 직접 위협하고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방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테러방지법>, <적성국 무역법>을 비롯한 수많은 악법을 휘둘러 우리의 대외적인 유무상통의 길을 모조리 봉쇄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용돈 한푼도 건네주지 못하게 하여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려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조선반핵평화위원회 고발장, ‘미국은 제네바 합의의 리행을 지연시키고 방해할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조선신보」, 1999. 01. 11. 김상기, “대북경제제재의 유효성 분석: 실태와 효과”, 『정책연구시리즈 2007-09』, 서울: 한국개발연구원(KDI), 2007. 09., pp.44~45.에서 재인용.

지도자가 되었다. 이와 함께 헌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정부원을 내각으로 개편하고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이라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내각으로 하여금 내치(內治)하도록 하였다.⁶⁷⁾ 이 시기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그간 미진했던 기간산업에 적극 추진하였는데 이는 군을 이용하여 내부기반을 다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내부지향적 정책 방향은 상대적으로 대외적인 부분, 즉 대외경제부분에 대한 관심저하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전시기와 마찬가지로 경제제재를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데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시기의 경제는 90년대 초반보다 나아지긴 하였지만 여전히 생산기반을 정상화 시키는데 부족하였고 이는 내부적인 생산효율의 증대만으로는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90년대 후반 북한은 대외적으로 방법으로 실리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미사일 발사이다. 1998년 8월 북한은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이 때문에 북한과 미국은 미사일관련 협상을 시작하였다. 미사일 협상 후인 1999년 3월 16일 미국과 북한은 평안북도 대관군 금창리의 지하시설 사찰 및 60만톤 식량지원에 합의했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북한과 미국 간 미사일 관련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이 합의와 함께 미국은 2000년 6월부터 대북경제제재를 완화하기로 하였다.⁶⁸⁾ 북한은 90년대 초반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전략적 모습을 보여주는데 장거리 미사일을 통해 미국의 관심을 이끌어 식량지원 합의와 경제제재 완화라는 실리를 확보한 것이다.

2002년에는 7.1조치라는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취해진다. 이는 가격, 물가와 경영분야의 환경을 개선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67) 김상기, “대북경제제재의 유효성 분석: 실태와 효과”, 『정책연구시리즈 2007-09』, 서울: 한국개발연구원(KDI), 2007. 09., p47.

68) 2000년의 완화 조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보를 합의한 1999년 베를린 합의의 결과로 나온 것으로서 가장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부가 실무절차를 거쳐 2000년 6월 19일 발표한 완화조치 내용은 북한산 원자재 및 그 외 상품의 미국 내 수입, 미국산 소비재 및 금융서비스의 대북수출, 농업 · 광업 · 석유 · 목재 · 시멘트 · 수송 · 도로건설 · 관광산업분야의 투자, 미국 민간인들의 북한 내 친지와 개인에 대한 송금, 미국 선박 및 항공기에 의한 일반 화물의 대북 운송, 북미 간 상업용 항공기 운항 등이다.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홈페이지 참조.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7184> (검색일: 2012. 04. 10)

행해졌는데 자세한 사항은 경제 분야에서 다루기로 한다. 7.1조치 이후 북한은 시장경제적인 요소들을 많이 도입하였는데 이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비공식부문을 공식화시킴으로서 주민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2005년부터 시장경제적인 요소들을 다시 지워가기 시작했다. 2005년 그동안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배급제를 다시 시작하고 7.1조치 이후 개설되었던 장마당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그러나 북한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장마당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으며 2007년에는 장마당을 허용하되 여러 제한을 두어 주민들을 통제하였다.

대외적으로는 2003년 또 다시 NPT를 탈퇴하고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을 비롯하여 북한 핵과 관련된 6개 국가들이 모여 6자회담을 벌인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 핵 동결에 대한 요구사항 중 우선순위로 테러지원국 지원해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없애달라고 요구하였다. 이 시기 북한은 대북제재를 ‘선전포고’, ‘적대시정책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주장하고⁶⁹⁾ 북한에 적용되고 있는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2005년 9월 미국이 북한의 위조지폐의 제조, 유통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처벌로서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북한의 불법거래지원혐의대상자로 지정해 북한의 자금을 동결하게 된다.⁷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은 2006년 함경북도 화대리에서 지하핵실험을 한다. 2006년 핵실험으로 인해 7월과 10월에 UN차원에서도 경제제재가 들어갔는데 이는 핵과 관련된 물품들의 수입, 수출 금지뿐만 아니라 북한 핵과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에게도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2007년 2.13합의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이시기에도 역시 북한은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군사적 행동으로 미국과 협상하고 경제적 지원을 받는 행태를 보여

69) 김상기, “대북경제제재의 유효성 분석: 실태와 효과”, 『정책연구시리즈 2007-09』, 서울: 한국개발연구원(KDI), 2007. 09., p54.

70) 이에 관련하여 미국은 BDA의 북한자금동결을 결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아니며 금융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국내법의 발동이고 6자회담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입장이었다. 김상기, “대북경제제재의 유효성 분석: 실태와 효과”, 『정책연구시리즈 2007-09』, 서울: 한국개발연구원(KDI), 2007. 09., pp.54~55.

주고 있다. 80년대 말부터 북한이 보여준 정치적 행태는 경제적 어려움
→ 핵이나 미사일 실험 → 주민통제(결속)/국제적 이슈 → 미국과의 협
상 → 경제제재완화 등 경제적 혜택 획득의 순서로 이루어져 왔다.

(2) 경제적 변화와 대응

북한은 1990년대 초 사회주의의 붕괴로 인해 소련·중국과의 무역 조건이 악화되자 수입과 수출이 줄었고⁷¹⁾ 이와 더불어 이들 국가의 물 자지원도 줄어들게 되었다. 이는 북한경제체제 전반에 엄청난 외부적 충격을 주었다. 내부적으로도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으로 인한 공업과 농업부문의 파쇄는 북한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대부분 지역에서 1992-93년경부터 식량배급이 불규칙해 지더니 급기야 90년도 중반에는 사상 초유의 기아상태에까지 처하게 되었다. 분석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이시기 60만-3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였다.⁷²⁾ 이와 더불어 전국의 공장기업소들 중 대부분은 가동을 멈추었고 90년에서 98년까지 9년 동안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시기 북한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은 경제제재의 결과라기보다는 사회주의진영의 붕괴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의 경제제재가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86년과 88년의 미국의 경제제재는 미국과의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제기관이나 다른 국가의 북한에 대한 원조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었다. 이로 인해 북한의 외자유치가 거의 차단되었다.

<표 2-4> 1990~2008년 북한의 경제상황(억 달러, %)

연도	무역총액	GDP(UN 추정)	GNI(한국은행추정)	경제성장률
1990	41.8	147.0	231	-4.3%

71) 1993년의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총액은 1987-90년까지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총액 평균에 10% 정도였다. Marcus Noland, "The Political Economy of North Korea: Historical Background and Present Situation", *A New International Engagement Framework for North Korea?*, AEI, 2004., p21.

72) Andrew S. Natsios, "North Korea's Chronic Food Problem", Stanford University Koret Conference "DPRK 2012", 2011. 02. 24., p4.

1991	27.0	136.9	229	-4.4%
1992	27.3	124.6	211	-7.1%
1993	28.3	107.4	205	-4.5%
1994	23.0	83.1	212	-2.1%
1995	23.1	48.5	223	-4.4%
1996	21.6	105.9	214	-3.4%
1997	22.0	103.2	177	-6.5%
1998	12.9	102.7	126	-0.9%
1999	13.7	102.8	158	6.1%
2000	18.4	106.1	168	0.4%
2001	20.3	110.2	157	3.8%
2002	22.0	109.1	170	1.2%
2003	25.8	110.5	184	1.8%
2004	30.1	111.7	208	2.1%
2005	33.4	122.6	242	3.8%
2006	35.5	137.6	256	-1.0%
2007	46.2	143.7	267	-1.2%
2008	56.3	133.9	248	3.1%

출처: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KOTRA, 『2009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을 토대로 작성.

이와 같은 경제상황에서 북한은 1991년 12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를 선포하고 외국인 투자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이후 북한은 1992년 10월 「외국인 투자법」, 1993년 1월에는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을 제정하여 외자를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⁷³⁾ 하지만 북한의 인프라 부족과 제한적인 개방 그리고 미국의 86년과 88년에 있었던 경제제재로 인해 그 성과는 미미하였다. 외자유치 노력과 더불어 북한은 내수경제 살리기에도 적극적이었는데 1994년부터 1997년 까지를 ‘사회주의 건설의 완충기⁷⁴⁾’로 설정하고 무역제일주의,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를 추구하는 ‘혁명적 경제전략’을 내놓았다. 그러나 위의

73) 김상기, “대북경제제재의 유효성 분석: 실태와 효과”, 『정책연구시리즈 2007-09』, 서울: 한국개발연구원(KDI), 2007. 09, p43.

74) 원래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97년까지 진행되었다.

표에서도 알 수 있듯 무역액은 하강 또는 정체 수준이었고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였다. 이에 따라 1994년에 414억 원(북한 원)이던 북한의 예산규모는 1995년에는 242억 원(북한 원)으로 급감하였다.⁷⁵⁾ 뿐만 아니라 1995년부터 홍수와 가뭄 피해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식량배급이 중단되어 곳곳에서 아사자가 속출하였다.⁷⁶⁾

1997년 10월 김정일은 당총비서에 추대되었고 다음해 9월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어 본격적으로 김정일체제가 출범하였다. 출범과 동시에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였는데 개정헌법은 구헌법에 비해 개인소유범위 확대, 시장경제 도입이라는 개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⁷⁷⁾ 김정일은 ‘강성대국론’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선군정치’를 강조하면서 군대식 동원방식을 체제운영의 기본으로 설정하였다. 이 당시 김정일이 내수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면서 나진-선봉 경제자유지역과 같은 외자 유치를 위한 개혁은 점차 시들해졌고 반면에 국내의 중공업과 기간산업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북한의 경제는 98년 이후 다시 플러스로 돌아선다. 하지만 98년 이후의 성장은 외부자원 유입에 따른 것이었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자생적 성장은 아니었다.⁷⁸⁾

2002년 7월 북한은 그들의 경제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였다. 바로 7.1조치라고 불리는 경제개혁조치가 단행된 것이다. 7.1조치의 주요내용은 가격 및 각종 요금의 현실화(국정가격과 농민시장 가격의 격차 해소), 임금의 인상(100~150원 → 2,000원) 및 차별화와 각종 사회보장의 축소(식량, 소비재, 주택 등에 제값을 지불), 환율의 현실화(1\$=2.2원 → 1\$=150원), 계획관리 및 기업관리 운영방식의 개선(독립채산제 강화와 생산전문화 유도)⁷⁹⁾ 등이다. 북한은 이와 같은 조치를 통

75) 신석호, 『김정일과 카스트로가 경제위기를 만났을 때』, 서울: 전략과 문화, 2008, p174.

76) 스테판 헤거드 · 마커스 놀란드(이형욱 역), 『북한의 선택: 위기의 북한경제와 한반도 미래』,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07, p127.

77) 두 헌법의 비교는 정영철, 『북한의 개혁 · 개방: 이중전략과 실리사회주의』, 서울: 선인, 2004, p70을 참고.

78) 윤덕룡,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변화와 그 영향”,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와 사회: 계획에서 시장으로?』, (윤영관, 양운철 엮음), 서울: 한울, 2009, p257.

7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영철, 『북한의 개혁 · 개방: 이중전략과 실리사회주의』, 서울:

해 생산과 소비의 사회주의적 계획체제를 정상화 시키고 인민들의 노동의욕을 고취시키며 환율을 현실화 하여 외국인 투자자 유치와 일부 주민들이 음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외국화폐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다. 이러한 내부경제의 개혁 외에도 북한은 외자도입을 위한 방안들을 내놓았는데 같은 해 9월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설치한다고 발표하였으며 11월엔 금강산관광지역과 개성공업지역에 대해 「금강산관광지구법」과 「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하였다.⁸⁰⁾

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적 변화에도 북한의 경제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7.1조치 이후의 경제성과는 뚜렷한 성장세 없이 완만하게 성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위의 표에 제시된 경제성장률 추이는 2005년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6년과 2007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리고 7.1 조치의 의미도 시간이 지날수록 퇴색되었는데 2005년 가을부터 다시 배급제가 실시되었고 2007년 4월에는 전국 농민시장 정돈사업이 실시되었다. 농민시장 정돈사업과 더불어 시장에는 각종 규제들이 실시되었는데 우선 연령제한을 두어 45이상만 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장사물품액도 20만원으로 한정되었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전국 시장에서 쌀 판매가 금지되었다. 이러한 시장규제뿐만 아니라 개인투자활동에도 제한을 두었고 모든 개인이 1억 원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7.1조치가 무색할 정도로 이전의 사회주의체제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⁸¹⁾

2) 리비아: 우리 모두 부자가 되자

(1) 정치적 변화와 대응

경제제재 이후의 정치적 변화는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에 기인한다. 우선 국내적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경제제재초기 카다피의 영향력이 더

선인, 2004, pp.138~139. 참조.

80) 김상기, “대북경제제재의 유효성 분석: 실태와 효과”, 『정책연구시리즈 2007-09』, 서울: 한국개발연구원(KDI), 2007. 09., p52.

81) 양문수, “시장 억제 정책기 북한의 시장화: 실태와 함의(2007-09년)”,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다 학제적 접근」, 서울대학교 2010년 통일학 기초연구 심포지움 발표논문, 2010년 2월, pp.58~60.

욱 증대되었다. 경제제재 초기에는 경제제재가 카다피 정권의 정치적 통합을 도왔는데 여기에는 리비아의 정치·경제가 외부의 위협세력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는 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와중에 1993년 리비아 군 내부에서 낮은 대우를 받는데 대한 불만 때문에 와르팔라 부족이 쿠데타를 시도하다가 실패하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카다피는 군대와 보안기관에 있던 와르팔라, 마가리하, 카다파 부족출신을 모아 회의를 열고 이들 부족 간의 단결을 촉구하였는데 이 과정을 통해 카다피는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키고자 하였다.⁸²⁾

둘째, 새로운 지역자치기구들과 대중감시기구들이 생겨났다. 1993년 9월에는 대중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인민사회리더십(popular social leadership)’을 창설했는데 이것은 각 지역과 부족을 통합하여 만든 자치적 기구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인민사회리더십’의 역할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지역차원의 군사반란을 막고 혁명정신을 전파하는 것이다. 카다피는 인민사회리더십에게 부족과 지역을 묶어 자치를 맡겼으며 그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하였다. 대중 감시 기구들이 생겨났다. 1996년 카다피는 정화위원회(purification committee)를 만들어 대중을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UN제재에 이어 96년 미국의 이란-리비아 제재법이 발효된 이후 리비아 경제는 더욱 침체를 거듭하게 되었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낮아졌으며 소득불평등은 더욱 커져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졌으며 이와 비례해서 이슬람 원리주의의 정서도 커져 갔다. 1995~97년 사이에 이슬람 원리주의가 대학가를 휩쓸게 되었고 이슬람 무장투쟁세력도 이 시기에 가장 격렬한 저항운동을 벌였고 군대와 충돌하는 일이 잦았다. 1998년에는 급기야 카다피 암살 시도도 이루어졌다.⁸³⁾ 이에 카다피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필수재에 대해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거의 모든 가구에 현금을 나눠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제제재로 인한 손실과 1997년 말부터 시작된 유가폭락으

82) Tim Niblock, *"Pariah States"& Sanctions in the Middle East: Iraq, Libya, Sudan*,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 2001, pp.88~89.

83) Tim Niblock, *"Pariah States"& Sanctions in the Middle East: Iraq, Libya, Sudan*,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 2001, p90.

로 리비아의 경제위기는 더욱 가중되었고⁸⁴⁾ 이에 카다피는 경제제재를 해제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와의 협력을 모색한다.

<표 2-5> 리비아의 협상과정

일자	주요내용
1999년 4월	리비아, 로커비 용의자 2명 UN측에 신병인도 UN 리비아 경제제재 잠정중단 # 하지만 미국은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재판의 협조 등의 이행조건을 만족시킬 때까지 경제제재의 지속 선언.
1999년 6월	18년 만의 미국-리비아 공식회담
1999년 7월	영국-리비아 외교관계 복원 합의
2001년 8월	미국 이란-리비아 제재법(ILSA) 5년 추가연장
2003년 8월	리비아, 미국 및 영국과 합의 로커비 사건 유가족에게 보상금(27억 달러) 지급합의
2003년 9월	리비아, 프랑스 UTA 폭파사건 잠정 합의 UN,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 공식해제
2003년 12월	리비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포기선언
2004년 1월	리비아 프랑스 UTA 사건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추가보상금 지급 합의, 미국과 영국의 핵 기술자들이 리비아로 입국하여 대량살상무기관련 원료 및 기술 파기
2004년 3월	미국, 미국인의 리비아 여행금지를 해제 미 의회대표단 리비아 방문
2004년 4월	미국, 리비아 여행금지 해제

출처: 박영호, 『리비아 경제제재 해제와 건설시장 확대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03., pp. 15~16. ;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U.S./UK Negotiations with Libya regarding Nonprolifer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8, No. 1, 2004, 02, pp. 195~197. 을 참고하여 작성.

84) 리비아산 석유 가격은 1996년 배럴당 21.06달러이던 것이 1997년에는 배럴당 19.36달러로 그리고 1998년에는 배럴당 12.90달러까지 떨어졌다.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2004, p120. 참조

우선 카다피는 그 동안 신병인도요청을 거부해온 로커비 사건의 용의자 두 명을 1999년 4월에 UN측에 인도하게 된다. 그리고 같은 달 UN은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잠정 중단한다. 1999년 6월 미국과 리비아는 18년 만에 회담을 열었는데 여기서 리비아 측 대표들은 미국이 대테러 제재를 완화해주면 리비아의 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미국은 리비아에 대해 지속적인 압박을 주기 위해 이를 거절하였다.⁸⁵⁾ 이후에도 미국은 2001년 7월 이란-리비아 제재법을 연장하면서 리비아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였다. 2003년 4월 리비아는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주제로 미국, 영국과 비밀협상에 들어갔다. 2003년 9월 UN의 제재가 공식적으로 해제되었고 같은 해 12월에 리비아는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의 공식적인 해체를 선언하였다.⁸⁶⁾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으로서 카다피는 90년대 초·중반에는 국내정치에 대한 단속을 하는 한편 이슬람 국가들에게 제재의 부당성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이후 리비아의 경제상황은 계속악화 되고 있었고 국민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만 갔다.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한 카다피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리비아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았으며 경제를 살려야지 자신의 권력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미국과 협상에서도 정권보장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카다피의 서방세계와의 화해는 국내 정치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쳤는데 지난 30년 동안 ‘반미’와 ‘반제국주의’를 외치면서 이슬람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제3세계 이론을 주장하였던 것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리비아에서는 이슬람 원리주의와 이슬람 민족주의가 더 크게 확산되고 카다피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져갔다.

85) Christopher M. Blanchard, Jim Zanotti, "Libya: Background and U.S. Rela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2007, p27.

86) 리비아는 대량살상무기 해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약속하였다. ① 화학무기 및 핵무기 프로그램 제거, ② IAEA에 모든 핵 관련활동 밝힘, ③ 사거리 300Km 이상 되는 500Kg 탄두미사일 제거, ④ 모든 화학무기와 군수품 재고를 제거하고 화학무기조약에 가입, ⑤ 미사일 기술 통제 레짐의 가이드라인 준수. Sharon Squassoni, "Disarming Libya: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RS Report for Congress, 2006. 09. p1.

(2) 경제적 변화와 대응

1980년대 리비아는 석유 수출로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하지만 80년대 중반부터 OPEC에서의 합의에 따라 생산량 할당과 제한이 부과되고 석유가격자체도 하락하여 리비아의 석유판매량은 80년에 21억 달러에서 86년 8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진다. 수출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에너지 수출이 급감하게 되면서 리비아 경제는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⁸⁷⁾ 이는 국가의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졌다.

<표 2-6> 리비아 전체투자 중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율(1970-1997)

연도	공공부문	민간부문
1970-1972	69.1%	30.9%
1973-1975	79.1%	20.9%
1976-1980	87.2%	12.8%
1981-1985	91.7%	8.3%
1986-1990	90.2%	9.8%
1991-1997	75.4%	24.6%

출처: Tim Niblock, "*Pariah States"& Sanctions in the Middle East: Iraq, Libya, Sudan*,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 2001, p63.

1970년대와 1980년대 전체 투자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적 성장과 함께 점차 높아졌다. 80년대 중후반까지 제조, 무역, 은행, 보험, 기타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산업이 공공화 되었다. 하지만 1982년이 지나자 앞서 언급했던 석유부문에서의 이익감소와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리비아 경제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카다피는 1987년 경제개혁을 실시하게 된다. 이 경제개혁

87)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와 같은 석유 수출액의 변화가 미국의 1982년 있었던 경제제재에서 기인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당시 미국의 경제제재는 리비아산 원유의 수입 금지였다. 그러나 80년대 초 리비아의 원유수출국 중 상당수가 유럽에 있었으며 미국은 주요 수출국이 아니었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제재가 가져오는 불이익은 이 당시 시점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라 볼 수 있다.

으로 인해 90년대 들어서는 공공투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대신 민간투자의 비율을 증가하게 된다.⁸⁸⁾ 그리고 이때부터 서서히 리비아에서 암시장도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80년대의 리비아는 미국의 경제제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경제제재를 대신할 다른 무역파트너를 찾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탈리아는 이 당시 리비아산 석유 수입을 80년 19%에서 87에는 33%까지 늘렸다.⁸⁹⁾

하지만 90년대 들어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1992년부터는 리비아가 저지른 로커비사건과 UTA사건 때문에 UN도 리비아 제재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UN은 92년과 93년에 리비아에 대해 경제제재를 내리게 되었는데 1992년의 제재는 리비아전역을 항공기 이착륙 금지구역으로 만들었고 이듬해인 1993년의 제재는 원유수송장비를 수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1996년부터 미국의 이란-리비아 제재법(ILSA)이 시행되면서 기업이나 국가가 리비아 석유시설에 대해 4,000만 달러 이상 투자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리비아의 손실은 더욱 커졌다. UN의 경제제재로 인해 1992년부터 1998년까지의 리비아의 연간 손실액은 2억 8,000만 달러에 달하고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1981년부터 1998년까지 연간 2억 9,5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파악된다.⁹⁰⁾ 앞서 살펴본 석유가격의 하락과 더불어 미국과 UN의 경제제재는 리비아를 더욱더 압박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난 속에서 1992까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던 리비아는 1992년부터 3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고 1995년부터 국제유가가 완만하게 상승함에 따라 다시 성장세를 보여주었으나 1997년부터 다시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다.

88) Tim Niblock, "Pariah States"& Sanctions in the Middle East: Iraq, Libya, Sudan,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 2001, pp.60~63.

89) Bruce W. Jentleson and Christopher A. Whytock, "Who "Won" Libya?: The Force-Diplomacy Debat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ory and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3, Winter 2005. 06. p61.

90) IIE(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Case Studies in Sanctions and Terrorism", <http://www.piie.com/research/topics/sanctions/libya3.cfm> 참조.

<표 2-7> 리비아의 연도별 GDP, 수출총액, 석유수출총액

연도	GDP(m/\$)	수출총액(m/\$)	석유수출총액(m/\$)
1990	28,944	13,225	10,715
1991	32,016	11,234	10,211
1992	33,926	10,793	9,326
1993	30,698	8,544	7,689
1994	29,142	7,865	7,170
1995	25,557	8,510	7,763
1996	27,886	10,155	9,543
1997	30,705	9,576	8,905
1998	27,260	6,032	5,612
1999	30,488	7,961	7,734
2000	34,613	12,716	12,230
2001	28,599	11,337	10,875
2002	19,359	11,487	10,482
2003	23,632	14,050	13,567
2004	29,027	20,203	18,653

출처: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2004, pp.11~13.

사회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는데 92년 UN의 경제제재 시행 이후 1997년까지 연평균 35%에 육박하였다. 이러한 물가상승은 리비아 국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데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적 임금이 삭감된 것이다. 이 때문에 카다피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1996년에 30만 가구에 5,000달러씩 나눠주었으며,⁹¹⁾ 이듬해인 97년에는 75만 가구에 배급표를 통해 필수 소비재에 대해 보조혜택을 주었고 이에 따라 국가 보조금 액수도 크게 증가하였다.⁹²⁾ 또한 리비아 노

91) Luis Martinez, *The Libyan Paradox*,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p127.

92) 국가 보조금 추이는 다음과 같다. (단위: 만 디나르)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2,300	4,100	3,600	9,800	14,400	16,000

Tim Niblock, *"Pariah States"& Sanctions in the Middle East: Iraq, Linbya, Sudan*,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 2001, p63.

동인구의 약 75%인 80만 명이 국가기관에서 혹은 국영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월급은 직급에 따라 달랐지만 비숙련공의 경우 한 달 임금이 약 150디나르였으며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약 300디나르(270디나르부터 시작)로 이들의 소득격차는 약 1:2 정도였다. 하지만 92년 제재이후에는 사무역, 사기업의 발달로 1:5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은 몰타로 배를 타고 나가 상행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암시장을 통해 물건을 사고팔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인적 경제행위는 카다피 정권이 가지고 있던 경제적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일종의 탈출구와 같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적 영역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는 카다피 정권의 기치인 평등주의에 위협이 되었다.

제재기간 중 리비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랐고 많은 국민들이 실업자가 되었다. 하지만 카다피는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 외에는 제대로 된 경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석유가격 하락과 OPEC의 수출쿼터제에 의한 석유 판매의 이익감소와 미국과 UN의 경제제재로 인한 경제의 위축 때문이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비 석유 분야에서의 비효율성과 잘못된 경제관리라고 볼 수 있다.⁹³⁾

93) Alison Pargeter, "Libya: Reforming the Impossible?" *Review of African Political Economy*, Vol. 33, No. 108, 2006, pp.220~221.

Ⅲ. 북한과 리비아, 서로 다른 대응방식의 원인

본 장에서는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북한과 리비아, 두 국가의 서로 다른 대응방식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해 북한과 리비아는 각기 다른 대응전략을 취했다. 북한의 경우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사상의 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반면 리비아는 뚜렷한 정치적 변화 없이 경제자유화와 부의 재분배를 통해 경제제재로 인해 야기된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핵 프로그램의 포기를 통해 경제제재를 해제 받았다. 따라서 본 장의 목표는 이와 같은 양국의 서로 다른 대응이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1절에서는 대외적 요인으로서 미국의 경제제재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미국의 경제제재가 북한과 리비아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다음으로 미국의 경제제재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공조가 잘 이루어졌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들을 바탕으로 북한과 리비아에 부과된 미국의 경제제재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2절에서는 대내적 요인으로서 북한과 리비아의 정치와 경제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로 두 국가의 체제상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두 국가의 체제상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북한과 리비아의 정치·경제의 분석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두 국가들이 어떠한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그리고 북한과 리비아의 정치와 경제의 구조적 분석을 통해 미국의 경제제재가 두 국가에게 어떻게 다른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 3절에서는 대외적 요인인 미국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와 제재의 국제공조 그리고 대내적 요인인 북한과 리비아의 정치와 경제의 구조 가운데에서 어떠한 요소가 양국이 서로 다른 대응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는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1. 대외적 요인

1) 미국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

북한과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는 두 국가의 정책적 차이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다. 만약 경제제재로 인한 두 국가의 경제적 변화가 두 국가 사이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면 예를 들어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해 한 국가의 경제는 심한 피해를 입었고 나머지는 한 국가의 경제는 건재하다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심한 피해를 입은 국가는 자신의 정책을 바꿔서 경제를 살리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두 국가 모두 경제제재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두 국가 모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에는 두 국가의 정책적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 중에서 경제적 피해라는 요인은 배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경제제재가 북한과 리비아 경제에 준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북한과 리비아 모두 경제제재에 의해서만 이러한 경제적 침체가 일어났나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 블록이 무너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엄청난 시장을 잃었고 이를 대체할 만한 시장을 찾지 못했다. 또한 90년대 중반에는 홍수와 가뭄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산업시설에 피해를 입었고 농업은 피해 수준이 아니라 폐허가 되었다. 이 때문에 90년대 이후 북한은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경제제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경제제재로 인한 피해와 앞서 언급한 요소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분리해서 측정할 것인가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임이 아닐 수 없다.

리비아의 경우, 북한보다는 비교적 경제제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추정하기가 쉬운 편이나 유가를 고려하지 않고 서는 정확하게 측정될 수 없을 것이다. 석유의 생산량이 많아도 유가로 인해 석유 생산판매액이 줄어들 수 있고 매년 무역의 85%~90%이상을 석유판매로 충당하는 리비아의 경제구조를 보았을 때⁹⁴⁾ 유가의 등락은 리비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94)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2004. 참조.

있다. 따라서 리비아의 경제제재로 인한 손해를 파악하려 한다면 유가를 염두 하면서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에게 1988년부터 테러 지원국으로 분류되어 대출,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의 금지, 1992년에는 미사일, 전자, 우주항공, 군용기의 생산 제조와 관련된 북한의 활동금지, 이후 핵확산 금지법을 적용하여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물품, 기술, 금융 등을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 개인, 단체 등에 대해서도 제재하였고 2006년 핵실험 이후에는 UN의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관련된 물자를 통제하였다. 북한은 지난 1990년 무역총액이 41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1998년에는 14억 4천만 달러까지 하락하면서 199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2002년에는 2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98년 이후 완만한 성장세를 이루었으나 90년의 무역총액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북한의 이러한 무역에서의 후퇴는 상당부분이 냉전 종식 후 러시아와의 교역급감, 90년대 초반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이나 각종 제재로 인한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화학제품 등의 수입금지도 북한의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⁹⁵⁾ 북한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해 90년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제재의 피해액은 정확히 파악이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2005년~2007년 사이에 있었던 UN의 경제제재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추정결과로 살펴보면 북한은 약 15억 달러~37억 달러의 손해⁹⁶⁾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연평균으로 나누면 매해 약 5억~12억 달러 수준이다. 1990년에서 2008년까지 북한의 GDP를 평균 100억 달러~200억 달러⁹⁷⁾라고 가정했을 때 이는 전체 GDP의 약 5%~6%정도를 차지하며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를 감안하더라도⁹⁸⁾ 4%~4.5%정도에 해당한다. 이에 더하여 미국의 일방적 경제

95) 홍익표,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제재가 북한경제 미치는 영향”, 『세계경제』, 2003. 07., pp.42~44.

96) 현대경제연구원, “北 유엔제재로 최대 37억 달러 손실”, 아시아투데이, 2009. 06. 11.

97) UN추정치와 한국의 추정치의 차이.

98)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부분이다. 분명히 국제사회의 원조는 미국과 UN의 경제제재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중국과 남한은 때로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노력을 허사로 만들 만큼 대북 원조량을 늘리곤 했다. 그리고 중국과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인하여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는

제재로 인한 손실까지 더한다면 GDP가 리비아 보다 낮은 북한이 경제 제재로 인해 입는 손실은 리비아 이상으로 추정된다.

리비아의 경우는 UN의 경제제재로 인해 항공기 및 관련부품 금수조치에 따른 교역 감소, 석유장비 금수조치에 따른 가격상승, 무기 금수조치에 따른 교역 감소, 항공기운항중단조치에 따른 여행 및 운송비용 상승 등의 손실을 입었고 이는 연간 2억 8,2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⁹⁹⁾ 또한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서는 리비아산 원유수입금지, 수출입 제한조치에 따른 양국 간 비석유제품의 교역감소, 미국인 석유기술자(750명) 철수, 보잉제트기 판매중단, 불태환(nonconvertible currencies)국의로의 교역이전에 따른 구매력 감소, 금수조치에 따른 미국-리비아 간 교역감소, 미국 내 리비아 자산동결로 인해 1982~2004년 동안 연평균 3억 5,0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⁰⁰⁾ 미국과 UN의 경제제재로 인한 연평균 손실은 4억 1천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1990~2004년 리비아의 GDP 193억 달러~346억 달러에서 약 2~3.5%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지 않은 손실을 주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리비아 내 많은 석유 정제시설이 미국산임을 감안 했을 때 석유 장비의 업그레이드 불가로 인한 석유생산량의 확대 제한도 손실로 작용하였다.¹⁰¹⁾

2) 경제제재의 국제공조

양국에 대한 경제제재의 국제공조도 그 효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

데 큰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헤거드와 놀란드가 제시한 1996년~2005년 사이의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원조는 연간 0.5억 달러~4억 달러 수준이며 이는 연평균 2.44억 달러 수준이다. Stephan Haggard & Marcus Noland, *Famine in North Korea: Markets, aid, and refor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APPENDIX 2,3 Consolidated Appeal Humanitarian Assistance 참조.

99)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Case Studies in Sanctions and Terrorism: Libya", <http://www.piie.com/research/topics/sanctions/libya3.cfm>, (검색일: 2012. 04.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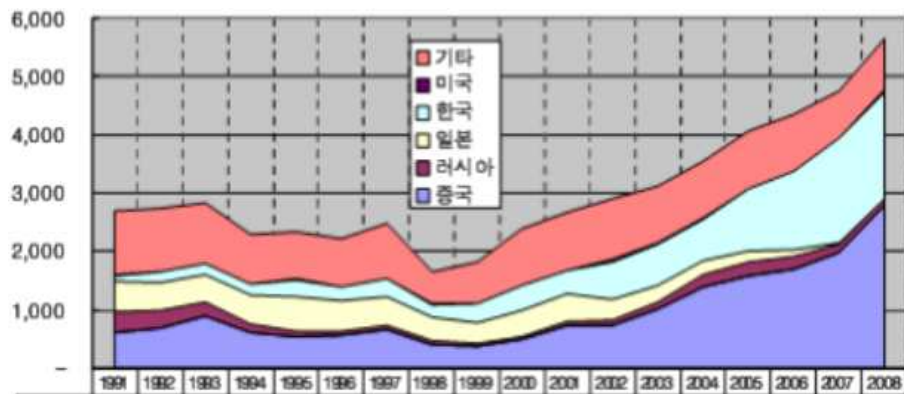
100) 리비아의 세부항목별 연간 손실액은 뒤에 부록을 참조할 것.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Case Studies in Sanctions and Terrorism: Libya", <http://www.piie.com/research/topics/sanctions/libya3.cfm>, (검색일: 2012. 04. 10)

101) Christopher Boucek, "Libya's Return to the Fold?" FPIF Policy Report, April 2004, <http://www.fpiif.org/papers/2004libya.html>, pp. 3~4.

향을 미친다. 만약 양국과 밀접한 경제적 관계가 있는 국가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제재에 참여할 경우 제재의 대상이 되는 두 국가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만약 북한과 리비아의 사례에 있어 북한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경우가 있는 국가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제재에 참여를 하고 리비아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국가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제재에 참여 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입는 경제적 피해가 클 것이며 이는 정책변화의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라면 즉 리비아사례가 북한에 비해 경제제재의 공조가 잘 되었다면 리비아가 가지는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성은 북한보다 클 것이고 이는 리비아 정책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두 국가의 경제제재에 대해 어떤 국가에서 공조가 더욱 잘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북한의 경우 1991년부터 소비에트 블록이 무너짐에 따라 러시아와의 교역이 급감하게 된다. 그리고 9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그러나 이것이 러시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제재에 참여했다 라기 보다는 소비에트 붕괴에 따른 충격인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듯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은 냉전기 소련과는 바터무역과 특혜가격으로 무역을 하였으나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는 바터무역이 사라지고 국제시장 가격으로 무역을 하게 된 것이다. 북한은 이와 같은 러시아의 공백을 중국과 일본과의 교역으로 만회하려 하였다. <그림 3-1>과 <표 3-1>을 보면 90년대 초반 러시아와의 교역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중국과의 교역량은 늘어나고 일본과의 교역량은 같은 수준이거나 소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일본도 점차 교역을 축소시키게 되고 2006년부터는 교역을 거의 중단한다. 미국은 애초부터 북한과 교역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림 3-1> 북한 주요 교역국들의 무역액 변화(단위: 백만\$)



출처: 성채기, “국제적 대북제재의 현황과 군사 · 경제적 영향분석 및 전망”, 『국방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통권 제86호, 2009, p30.

<표 3-1> 1991~2008년 북한의 주요 교역국 교역량(단위: 백만\$)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기타
1991	111	611	508	385	0.5	1,101
1992	174	697	480	292	0.1	1,086
1993	187	900	472	227	2.0	1,045
1994	195	624	494	140	0.2	843
1995	287	550	595	83	11.6	812
1996	252	596	518	85	0.5	828
1997	308	656	489	84	2.4	945
1998	222	413	394	65	4.5	565
1999	333	370	351	50	11.3	698
2000	425	488	464	48	2.9	968
2001	408	740	475	68	0.7	986
2002	642	738	369	81	25.0	1,047
2003	724	1,023	266	118	8.0	976
2004	697	1,385	252	213	25.2	980
2005	1,056	1,580	194	292	5.8	989
2006	1,350	1,700	122	211	0.0	964
2007	1,796	1,974	9.3	160	1.7	795
2008	1,820	2,787	7.7	111	52.2	857

출처: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1991~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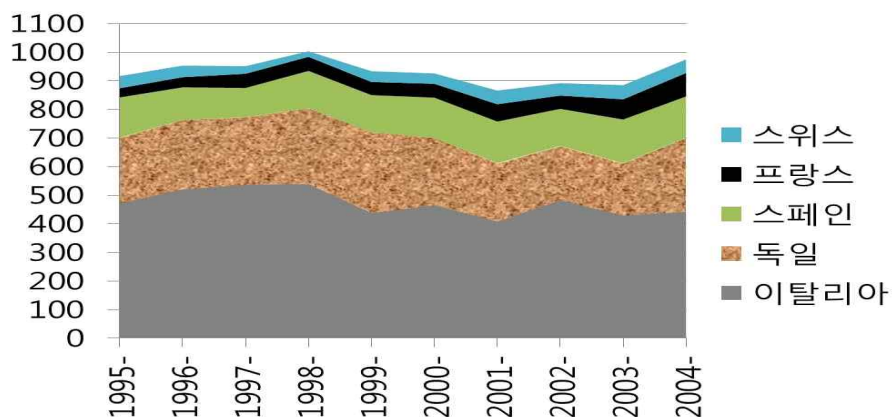
리비아는 80년대부터 미국의 제재를 받아왔다. 그러다 80년대 후반의 연이은 폭탄테러와 이 테러에 대한 용의자신병인도 거부로 1992년부터는 UN차원에서도 경제제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유엔 경제제재 시기인 1992~1999년(잠정적 중단) 사이에 리비아 석유의 주요 고객들이었던 서유럽 국가들은 리비아산 석유의 수입량을 유지시키거나 소폭 증가시켰다. 특히 미국이 1996년 이란-리비아 제재법(ILSA)을 발효시켜 리비아 석유 산업에 4,000만 달러이상 투자하는 국가나 기업, 단체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기로 결정했을 때 오히려 유럽에서는 반(反) 디마토법을 제정하여 미국에 대항하기도 하였다.

<표 3-2> 리비아 원유 5대 수입국들의 연도별 수입량(단위: 1000b/d)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이탈리아	473.8	521.9	538.4	539.7	438.9	466.9	409.6	484.6	431.7	444.6
독일	227.6	241.5	234.6	264.2	281.5	233.7	202.5	187.7	180.1	256.7
스페인	140.7	113.9	102.1	130.8	129.8	140.7	145.5	129.9	153.0	144.2
프랑스	32.2	35.5	49.9	49.5	46.0	48.5	60.8	46.5	70.9	82.3
스위스	42.3	40.6	26.4	19.5	37.6	36.3	47.7	43.5	49.3	47.5

출처: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2004, p89.

<그림 3-2> 리비아의 5대 원유 수입국들의 연도별 수입추이
(단위 1000배럴/하루)



출처: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2004, p81.를 토대로 작성.

위의 <그림 3-2>와 <표 3-2>를 보면 UN의 실질적인 제재 기간이었던 1999년까지 스페인과 스위스만 리비아산 석유 수입량을 소폭 줄였고 나머지 국가들은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시킨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UN의 제재가 끝나는 시점인 1999년 이후에도 수입량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UN제재와 이들 국가의 수입량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듯하다. 또한 1996년 미국의 이란-리비아 제재법이 발효되고 나서 2004년에 종료할 때 까지 이들 국가의 석유 수입량은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UN과 미국의 경제제재는 최소한 경제적 영역에서의 국제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북한과 리비아 사례에서 경제제재의 국제공조를 살펴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미국과 UN이 이들 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를 실시하였다고 해도 이들의 주 교역국들은 미국과 UN의 경제제재에 동참하여 두 국가에 대해 경제교역을 축소하거나 중지하지는 않았다. 다만 북한의 사례에서 일본은 2003년 이후 급속하게 경제교역을 줄이는데 이것은 일본이 미국과 UN의 경제제재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일본인 납치 문제 때문에 자체적으로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한 것이었다.¹⁰²⁾ 따라서 미국과 UN의 경제제재 부과에 따라 이에 동참한 국가들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듯 보인다.

2. 대내적 요인

1) 북한과 리비아의 체제적 특징: 우리식 사회주의 국가 VS. 지대국가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가 어떠한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 코르나이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코르나이는 사회

102) 미즈라 미츠히로,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p. 11~18.

주의 사회체제의 영역을 블록(block)으로 표현하며 총 5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한다. 각각의 블록(block)에 대한 설명은 <표 3-3>에 잘 나타나 있다.

< 표 3-3 > 사회주의의 사회체제 영역

block 1	정치구조에 대한 것으로 권력을 쥔 당은 사회주의 체제의 공식 이데올로기와 결합해야 하며 이것은 맑시스트-레닌주의 당이어야 한다.
block 2	사회주의 체제는 국가소유(준 국가소유, 협동적 소유 포함), 적어도 경제의 기간산업 부문은 국가소유형태를 취한다.
block 3	블록 3은 관료주의적 조정메커니즘에 관한 것으로 사회주의체제의 중심적 메커니즘은 관료제적 조정으로 이루어지며 일단 정치구조, 공식 이데올로기, 국가소유가 갖춰지면 관료적 통제가 지배기제로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block 4	행위자의 이익과 동기, 행위와 관계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계획 교섭(plan bargaining), 양의 강조(quantity drive), 상충의 온정주의적 행위,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가격에 대한 약한 반응성 등의 현상을 나타낸다.
block 5	강제된 성장, 노동력의 부족, 실업률 증가, 만성부족경제(chronic shortage economy), 대외무역의 제한 등의 현상을 포괄한다. 이는 정치구조와 이데올로기가 권력을 잡고 그 결과 특정한 소유형태가 발전하여 관료제적 조정 및 구성원들의 전형적 행위패턴을 이끌어 냈고 이는 위와 같은 현상들을 촉발시킨다.

출처: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360~365.
참조.

이들 5개의 블록은 사회주의 체제를 이루는 중요한 영역을 나타낸다. 코르나이는 이들 5개의 블록가운데서도 block 1~3까지가 사회주의 체제의 핵심이며 가장 특징적 부분이라고 언급하는데 만약 사회주의 체제 개혁에 있어 블록 1~3에 해당되는 영역에서 급진적이지만 온건한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을 ‘개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3개의 영역은 사회주의 국가의 핵심인 이데올로기와 그에 따른 소득창출,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관료체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그는 사회주의국가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주의체제가 변화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체제변화는 고전적 사회주의→개혁사회주의→사회주의체제전환의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블록 1~3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개혁사회주의로 가는 첫걸음인데 만약 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개혁사회주의 체제라는 것이다.¹⁰³⁾ 그리고 이러한 개혁사회주의 체제는 그 내용과 단계에 따라 시장화(분권화)→사유화→자유화의 순서로 완성된다고 설명한다.¹⁰⁴⁾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장화의 기본적인 개념은 자원의 배분에 있어 계획이 아닌 시장적 거래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이 가격이 발신하는 정보의 시그널에 의해 소비와 투자가 이루어지며 이는 나아가 거시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이 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⁰⁵⁾ 그리고 시장화는 분권화(decentralization)와 함께 나타나는데, 이는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혁초기에 집권적 의사결정에서 분권적 의사결정¹⁰⁶⁾으로의 변화를 추구한다.

103) 본 연구에서 사회주의의 체제 자체관한 내용만 언급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변화까지 언급하는 것은 만일 북한이나 리비아에서 본문에서 언급한 블록 1~3에 해당되는 부분이 변화한다면 고전적 사회주의와 개혁사회주의 라는 서로 다른 체제로 변질되기 때문에 하나의 사회주의체제로는 두 국가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104) 이와 관련해서는 table 24.1 'The Depth and Radicalism of the Changes'를 참고할 것.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 566.

105) 김일기, “체제변화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개혁·개방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제1호 (2006) p. 101.

106) 프란츠 서만은 분권화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분권화란 몇몇의 중앙부서로부터

사유화(privatization)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국가에서 민간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적 소유권을 사적 소유권화 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소유제도의 다양화, 사적경제활동의 허용, 농업부문에서의 개인책임 생산제 도입, 개인의 이익 인정 등을 들 수 있다.¹⁰⁷⁾

자유화(political liberalization)는 코르나이가 말하는 block 1 즉, 맑스-레닌주의의 일당독재에 영향을 주는 개념으로서 정치적 자유화를 의미한다. 이는 공산당의 권력독점 및 반대세력에 대한 억압의 완화, 공식적 이데올로기의 약화 등을 가져오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일반주민의 일상생활에서의 탈정치화가 진행되며 이와 더불어 사생활과 비정치적 영역(취미, 친목 등)이 등장하게 된다.¹⁰⁸⁾

이와 같은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을 북한과 리비아에 적용시켜 보면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에서 보면 북한과 리비아 모두 코르나이가 언급한 블록 1 ~ 블록 5까지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¹⁰⁹⁾ 또한 사회주의 이행의 관점에서 바라보아도 두 국가 모두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¹¹⁰⁾ 하지만 두 국

터 의사결정의 권력이 아래로 이전되는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분권화는 두 가지 형태를 띠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의사결정 권력이 모두 생산단위로 내려가는 것. 두 번째는 의사결정 권력이 단지 몇몇의 지방 정부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전자를 진정한 의미의 분권화라고 여긴다고 설명하고 있다. Franz Schurma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Berkely,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p. 175

107) 정형곤, 『체제전환의 경제학』, (청암 미디어 2001), pp. 76~84.

108)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비교사회주의를 통해 본 북한의 현재와 미래』, (해남 2004), p. 207.

109) 북한과 리비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첫째, 북한의 노동당과 리비아의 혁명위원회는 양국 체제의 공식이데올로기와 결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경제의 국가소유 측면에서는 북한보다 리비아가 민영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양국 모두 핵심 기간산업은 모두 국가소유였다. 셋째, 양국 모두 관료적 통제가 지배적이었다. 넷째, 양국 모두 연성예산제약이 있었으며 가격에 대해 약한 반응성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양국 모두 국가주도 내지는 국가의 계획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노동력의 부족이나, 실업률, 대외무역의 제한 부분에서는 두 국가 사이에 편차가 존재하였다.

110) 사회주의 체제이행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시장화, 사유화, 자유화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시장화의 측면에서 북한은 지금 까지도 계획경제를 추구하고 있는데 반해 리비아는 카다피 집권 초기부터 시장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사유화의 측면에서 북한은 80년대 들어 극히 일부의 영역에서 사유화를 허용하였으나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리비아의 경우 87년 경제자유화 조치인 인피타를 실시하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민영화 되었으나 여전히 기간산업은

가가 같은 수준의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는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북한과 리비아 모두 자신들만의 개념들이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와 결합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회주의 체제논의를 바탕으로 북한과 리비아의 체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북한의 경우 8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형태로 북한에서 원용되어왔다. 하지만 김정일이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한 이후 주체사상을 강조하게 되면서 주체사상은 자연스럽게 맑스-레닌주의를 대체하게 되었다. 하지만 핵심 이데올로기만 맑스-레닌주의에서 주체사상으로 바뀌게 되고 이 핵심 이데올로기와 결합하는 핵심 당은 맑스-레닌주의 정당인 조선노동당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 조선노동당은 주체사상과 결합하여 국가의 해계모니 즉 핵심기치와 담론을 생산하게 되었다.

북한에서의 고전적 사회주의체제는 우리식 사회주의와 결합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은 유일지도체계(唯一指導體系)이다. 유일지도체계는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지도자(수령)를 중심으로 전체사회가 전일적인 하나의 틀로 편제되어 있으며, 자신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체계(혁명적 수령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를 갖추고 있는 지도체계를 말한다.¹¹¹⁾ 북한의 정치-경제는 이러한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두고 유일지도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결합시키는 독특한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리비아의 경우 북한과 마찬가지로 정치·경제적으로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리비아에서도 카다피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자마히리야 체제가 형성되었는데 북한이 맑스-레닌주의를 주체사상으로 교체했듯이 리비아도 엄밀한 의미의 사회주의는 아니었지만 사회주의와 이슬람문화를 결합시킨 자마히리야 체제를 형성하고 이를 국가의 근본으로 삼았다. 이는 엄밀한 의미의 맑스-레닌주의는

국가 소유였다. 마지막 자유화는 정치적 자유화의 요소를 담고 있는데 이는 북한과 리비아 모두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국가에 해당사항이 없다. 체제이행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두 국가 모두 고전적 사회주의 모델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다.

111) 이종석, “‘우리식 사회주의’의 내용과 한계: 유일체제의 경제적 영향을 중심으로”,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침체와 대응』, 서울: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1995, p. 188.

아니었지만 사회주의의 기본이념이 들어간¹¹²⁾ 공식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카다피는 북한의 노동당과 같이 이데올로기를 수호할 집단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혁명위원회였다. 혁명위원회는 지배정당의 개념으로서 의회나 사법부의 상위에 존재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국가의 중요시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혁명위원회는 다른 국가기관들을 감시하고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도록 교정하는 임무도 맡았는데 이는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치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리비아도 고전적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고전적 사회주의 정치체제에 더하여 리비아는 그들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지대국가(Rentier state)’의 특성이다. 이는 ‘지대국가이론(Rentier State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지대국가이론은 아랍 국가들의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변수에 대한 논의로서 정부재정수입에서 자연자원수출로 인한 수입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지대국가(rentier state)에서 권위주의가 지배적이며, 특히 ‘석유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론이다.

지대국가의 특징은 지대국가가 석유를 해외에 판매하여 지대가 해외로부터 유입되며, 그 지대가 직접적으로 정부 재정수입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대로 인한 부(富)의 창출에 극히 소수가 관여하지만 국민 절대 다수는 그 지대로 인한 수입의 분배와 이용에 수동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다. 지대국가 이론에서 지대국가는 다음의 3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막대한 석유판매이익으로 인해 정부는 대중들로부터 세금을 걷을 필요가 없다. 둘째, 석유판매이익은 국가로 하여금 그들의 반대세력을 억압하거나 돈으로 충성을 살 수 있게 한다. 셋째, 석유에 의한 부는 민주주의에 호의적이지 않은 사회구조를 만들어 낸다.¹¹³⁾ 이러한 지대국가

112) 카다피는 가난, 무지 및 불공평으로부터 개인의 해방, 제국주의와 반동분자로부터 리비아의 해방 그리고 전 아랍세계의 정치-경제 및 사회적 해방을 강조하였다. Mu'ammarr Al-Qaddafi, *The Green Book*, Tripoli: The Green Book World Center, 1980. 참조

113) Hazem Beblawi, Giacomo Luciani, *The Rentier State*, New York: Croom Helm, 1987, p63.

이론으로 리비아를 살펴보면 리비아도 세금의 존재가 없다는 점, 카다피가 돈으로 부족들의 충성을 샀다는 점 리비아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없었다는 점 등에서 지대국가이론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리비아의 정치체제는 고전적 사회주의의 틀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대국가의 특성이 결합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북한과 리비아의 정치적 구조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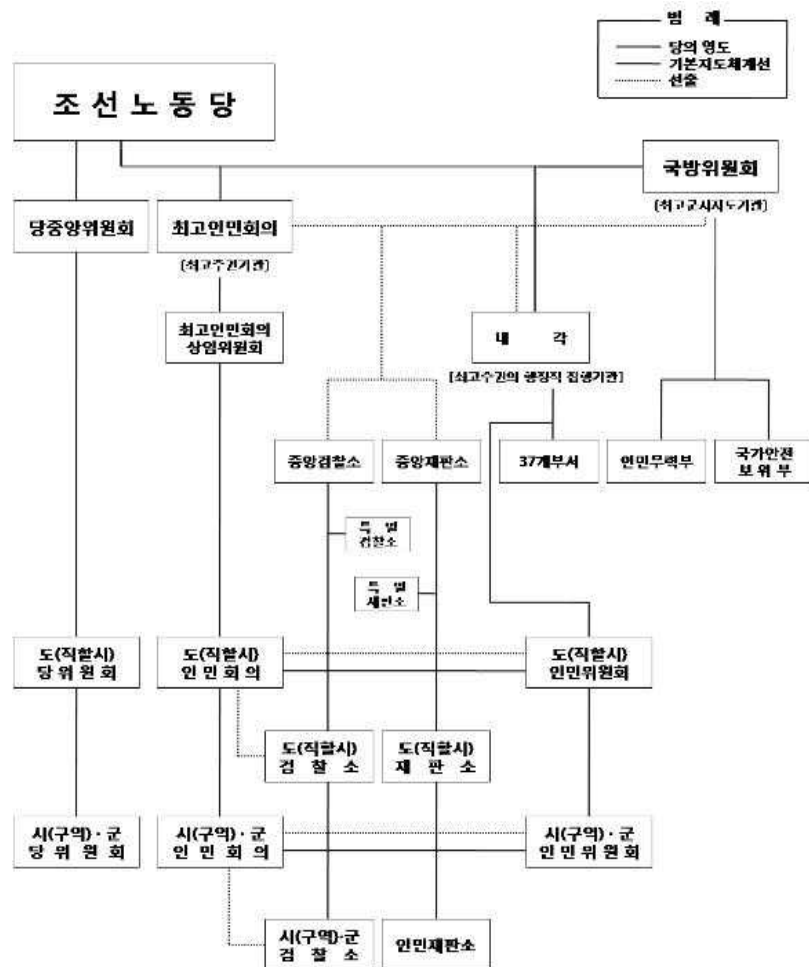
북한과 리비아의 정치적 구조를 살펴보면 비슷한 기구들이 눈에 띈다. 이는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두 국가 모두 최고지도자와 보위하는 핵심단체들이 있으며 이들은 군과 정의 상위에 위치해 있고 이들을 통제한다. 그리고 이들의 의사결정을 군과 정에게 하달하며 군과 정은 이를 대중들에게 하달하는 방식도 유사하다. 하지만 대중과 핵심집단의 역학관계는 사뭇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우리식 사회주의와 지대국가이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식 사회주의의 북한은 유일지도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의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권력기관들이 대중들과 밀착된 형태로 체제가 변화되어 갔다. 이에 반해 지대국가인 리비아는 권력기관과 대중들이 대중들과 밀착하려고 하기 보다는 대중들의 위에 서서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국가체제가 변화되어 갔다.

먼저 북한을 살펴보면 북한의 정치적 구조는 당과 대중의 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조선로동당의 수뇌로서 김정일이 존재하고 김정일의 뜻을 관철시키고 이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것이 바로 당이다. 당은 최고지도자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사회, 군대를 유일적으로 지도·통제하는 권력기구로서 최고지도자의 이데올로기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중(군중)노선’의 추구를 통해 대중에게 접근한다. 북한에서는 지도자는 ‘현지지도’의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지도하며 당도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중앙당조직과 지방당 조직들은 대중 속으로 들어가 당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지도한다.¹¹⁴⁾ 현재 북한

114) Bruce G. Comings, "Kim's Korean Communism", *Problems of Communism*, 1974. 03., pp.29~31.

의 조선로동당은 군과 정의 우위에 서서 당의 행정지시를 정에게 전달하고 정은 이를 다시 지방기관에 행정지시를 내려 각종 사업들을 추진한다. 여기서 정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능과 그것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질적, 조직적 수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의 노선과 정책의 집행자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당은 근로단체들을 통해 비당원인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교양하고 통제한다.¹¹⁵⁾

<그림 3-3> 북한의 정치체제



115)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5., pp.255~256.

출처: 통일교육원, 『김정일 현지도 동향 1994~2008』, 서울: 통일교육원, 2009. p228.

또 하나 북한의 정치체계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외곽단체이다. 북한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연령별, 계층별, 성별, 직업별로 조직을 구성하여 단체 활동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단체들이 소위 말하는 당의 외곽단체인 근로단체로 분류되어 다양한 활동을 한다. 이러한 근로단체들은 총4개가 존재하는데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이 그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비당원들을 사상교양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여기서 근로단체(외곽단체)들은 조직생활을 통한 상호비판과 자기비판 그리고 주 생활총화, 월 생활총화, 분기별 생활총화 등을 통해서 수령과 당의 사업들을 잘 이해하고 당의 후비대 역할을 하게 되며 이와 동시에 대중에게 수령의 사상과 당의 기조를 대중들에게 전파하는 역할도 맡음으로서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transmission belt)의 역할을 하게 된다.

<표 3-4>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 현황

단체명	가입대상	구성인원	구성방법, 활동
직업총동맹	노동자, 사무원 31세~65세 (여60세)	약 160만 명	-노동자, 사무원, 직장단위 조직 -9개의 산별직업동맹 -사상교양, 기술습득, 노력경쟁운동
농업근로자동맹	협동농장원 31~65세 (여60세)	약 130만 명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상교양, 농촌사업 지도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청소년 14~30세	약 500만 명	-학교, 직장단위 -당 후비대, 사상교양, 노력동원
조선민주 여성동맹	여성 31~60세	약 50만 명	-타단체에 속하지 않은 여성 -당 후비대, 사상교양, 노력동원

소년단	어린이 7~13세	약 300만 명	-학교단위 -청년동맹의 지도, 집단생활
-----	--------------	----------	--------------------------

출처: 정영철, “북한 사회통제 메카니즘의 변화와 특징: 사상적, 물질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고찰”, 『統一問題研究』 97년 하반기호(통권 제28호), 1997. p62.

다음으로 리비아의 정치적 구조를 살펴보면 리비아에서는 혁명위원회가 북한에서의 노동당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 혁명위원회는 리비아의 정치체제인 자마히리야의 한 요소로 간주된다. 리비아에서는 대중권위와 혁명권위가 존재하는데 대중권위는 기초인민회의를 통해 대중들에 의해 운영되고 혁명권위는 카다피와 혁명위원회를 통해 ‘혁명감시’의 형태로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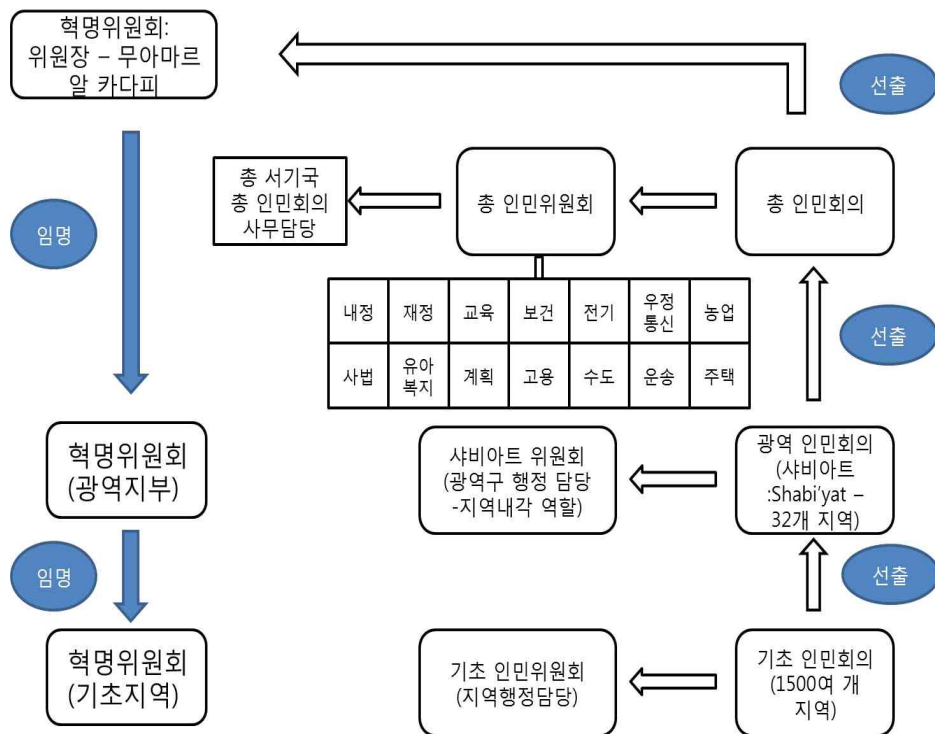
기초인민회의는 대중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이 지방의회를 형성하는데 상당수는 부족의 족장들이 선출된다. 그리고 이들이 대표를 선출하여 광역의회를 구성한다. 그리고 최상위 단계의 의회로서 인민의회가 존재하는데 이 인민의회에서 각 부처의 장관들을 결정한다. 리비아의 의회는 ‘대중주권’을 실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혁명위원회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

혁명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대중을 동원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는 카다피의 명령에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¹¹⁶⁾ 리비아의 혁명위원회는 1978년 3월에 설립되었는데 이때까지 카다피와 함께 해오던 혁명평의회가 해체되고 나서 조직된 기구로서 기존의 혁명평의회가 과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혁명위원회는 체계화된 기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혁명위원회는 대중을 동원하고, 통제하며 총 인민회의와 총 인민위원회를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서는 카다피의 사상과 자마히리야의 정치적 목표를 강제하는 기구가 되었으며 정보기구의 역할까지 담당하였다. 혁명위원회의 인원은 약 6만 명이며 전국에 지역혁명위원회를

116) Omar I. El Fathaly and Monte Palmer, "Institutional Development in Qadhafi's Libya", Dirk Vandewille, *Qadhafi's Libya*,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p164.

두고 있다. 지역혁명위원회는 중앙혁명위원회에 보고만 가능할 뿐 직접 사업을 벌이지는 못한다.¹¹⁷⁾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혁명위원회의 기능 중에 개인들 간의 그리고 그룹들 간의 의사소통을 막아 사회의 불안정을 촉진시킨다는 것인데¹¹⁸⁾ 이는 부족체제인 리비아에서 부족들 간에 경쟁을 이끌어 내려는 카다피의 의도인 듯 보인다.

<그림 3-4> 리비아의 정치체제



출처: Dirk Vandewille, *Qadhafi's Libya*,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 John Davis, *Libyan Politics: Tribe and Revolution*, London: I.B.TAURIS & Co Ltd Publishers, 1987. ; Tim Niblock, "Pariah States"&

117) Hanspeter Mattes, "The Rise and Fall of the Revolutionary Committees", Dirk Vandewille, *Qadhafi's Libya*,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pp.89~98.

118) Omar I. El Fathaly and Monte Palmer, "Institutional Development in Qadhafi's Libya", Dirk Vandewille, *Qadhafi's Libya*,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pp.164~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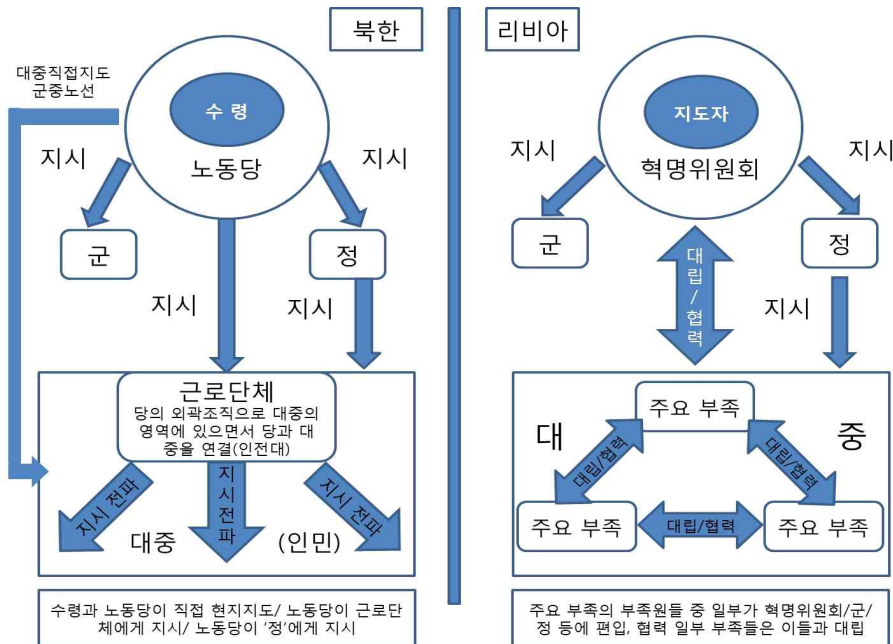
Sanctions in the Middle East: Iraq, Libya, Sudan,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 2001.을 토대로 필자가 재구성.

특기할만한 사실은 리비아에서는 북한과 같은 인전대의 역할을 할 만한 조직이 없다는 것이다. 카다피의 의도대로 리비아에서는 전 대중이 국가에 협력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 경쟁을 통해 카다피에게 협력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배경에는 리비아가 단일 민족도 아니며 단일 부족도 아닌 리비아의 인류학적 환경에 기인한다. 리비아에서는 민족적으로 크게 아랍계 민족, 베르베르족, 아프리카에서 온 테보족, 소수 유대인종들이 있으며 부족 적으로는 140여개의 부족들이 상존하고 있다. 리비아에서는 특히 부족에 대한 관념이 강해서 국가에 충성하기 보다는 부족에 더 충성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은 카다피의 사상 보다는 부족의 질서를 더 따르려고 한다.¹¹⁹⁾

리비아의 혁명위원회는 군과 정을 장악하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최고지도자의 사상을 지키는 요새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는 사실에서 북한의 로동당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로동당과는 달리 직접 대중들과 소통이 없으며 직접적으로 나서 대중에 대한 사상 혹은 사업지도를 하지 않았다. 북한의 최고지도자였던 김일성, 김정일이 때때로 각 지역을 방문하여 기업소, 군부대를 방문하여 지도, 지시를 하고 로동당 간부들로 하여금 하방(下方), 하향(下鄉)을 지시하여 직접적인 소통을 요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로동당의 외곽단체인 근로단체들을 만들어 당의 지시를 비당원 대중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인전대의 역할을 맡겼다. 또한 당은 정을 통해 각종사업을 지시하는데 정은 이러한 사업들을 각 하부기관에 다시 전달함으로서 마지막 세포 기업소들이 작업을 하게 된다. 아래의 <그림 3-5>에서도 알 수 있듯 북한은 당에 의한 직접지도, 근로단체를 통한 지도, 정을 통한 지도라는 3중 대중지도 방식을 가지고 있다.

119) Globalsecurity홈페이지, "Libya-Tribes",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libya/tribes.htm> (검색일: 2012. 03. 20)

<그림 3-5> 북한과 리비아의 정치적 통제 구조비교



출처: 통일교육원, 『김정일 현지도 동향 1994~2008』, 서울: 통일교육원, 2009. ; John Davis, *Libyan Politics: Tribe and Revolution*, London: I.B.TAURIS & Co Ltd Publishers, 1987. ; Tim Niblock, "*Pariah States*"& *Sanctions in the Middle East: Iraq, Linbya, Sudan*,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 2001.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반면 리비아의 경우는 혁명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위원회 그리고 각 지역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를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대중을 지도하는 경우는 없다. 또한 북한과는 다르게 부족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특정부족의 특정인원을 혁명위원회, 군, 정에 흡수하여 특정부족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대중을 지도하였다. 또한 노동당이 전국에 320만 여명의 당원¹²⁰⁾이 있는 반면 혁명위원회는 전국에 걸쳐 6만 여명의 위원을 두고 있어 인구비율로 보았을 때 노동당이 대중정당에 가깝다면 혁명위원회는 엘리트 집단에 가깝다고 볼

120)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서울: 통일교육원 2009. p48.

수 있다.

북한의 경우, 근로단체라는 인전대가 있어 교양사업과 사업지도라는 당의 지시를 효과적으로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반면 리비아는 인전대의 역할을 할 만한 조직이 없었다. 더불어 카다피나 혁명위원회의 지시는 주로 정을 통해 각 지역으로 전달되는데 이 과정에서 카다피에 협력하지 않는 부족들은 지시를 잘 받으려고 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제도적 구조로 보았을 때 북한보다 리비아가 사회를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3) 북한과 리비아의 경제적 구조 비교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본적으로 북한과 리비아는 둘 다 고전적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징들¹²¹⁾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두 국가의 경제적 구조를 파악하기 이전에 명심해 두어야 할 사실은 두 국가 모두 일정한 경제변화를 겪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2002년 7.1조치가 그것이고 리비아의 경우 1987년의 인피타가 그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자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일종의 개혁조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코르나이의 사회주의 체제변화의 특징을 가지고 이 두 국가를 살펴보면 양국 모두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양국이 일정한 경제체제의 변화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큰 틀 자체는 벗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국이 같은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를 살펴본다면 북한보다 리비아가 더욱더 개혁사회주의에 가까우며 이에 더불어 경제를 강조하는 지대국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북한과 리비아는 경제적 구조 또한 다른 모습을 보인다.

고전적 사회주의의 체제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평등’인데 사회주의체제는 한번도 ‘수입의 평등’을 주장한 적이 없

121) 기간산업의 국가소유, 관료적 조정기제, 연성예산제약, 가격에 대한 약한 반응성 등이 그것이다.

다. 사회주의에서의 분배원리는 ‘각자의 노동에 따라’ 임금을 분배하는 것이다.¹²²⁾ 이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는데 북한에서도 분배와 경쟁을 통해 물질적 통제를 해왔다. 북한에서의 분배는 일한 만큼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물질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차등분배를 실시하였다. 이는 리카르도의 노동가치설(Labor value theory)에 입각한 것으로 힘든 노동과 중요노동에 대한 분배를 많이 하고 쉬운 노동과 사무직에게는 적게 분배하는 것이다.¹²³⁾ 이러한 차등분배는 대중들로 하여금 북한에서의 분배정책이 노력과 강도에 따른 대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서 사회주의적 분배의 정당성을 재고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북한도 경제정책에서의 변화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임금 이외의 물질적 자극수단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에서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로서 이 같은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노동자의 노동유인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로동신문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생산 계획의 초과달성 부서나 사회주의의 모범이 된 시민들에게 특별상금이나 TV나 가전제품과 같은 부상을 줌으로서 그들에게는 성취감을 주고 그것을 보는 다른 이들에게는 근로의 유인을 고취시킨다. 이들에 대한 보상은 물질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명예(훈장)나 권위(특별칭호) 위신(특정인물에게 생일상이나 환갑상을 차려줌.)을 주어¹²⁴⁾ 북한사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노동자들의 노력경쟁으로 이끌며 이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서 하나의 사회통제의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한편 리비아의 경우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고전적 사회주의의 임금정책인 ‘노동에 따른 분배’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비숙련공의 월급은 150디나르, 숙련공은 250디나르 이상, 대학 강사는 270디나르 이상, 교수는 350디나르 이상을 월급으로 받게 되었다.¹²⁵⁾ 그리고 이에 더하

122)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324.

123) 정영철, “북한 사회통제 메카니즘의 변화와 특징: 사상적, 물질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고찰”, 『統一問題研究』 97년 하반기호(통권 제28호), 1997. p59.

124) 로동신문, 1995년 6월 15일자 참조

여 석유수출에 의한 막대한 수입(지대)은 무상의료, 무상주택, 무상교육이라는 인센티브를 만들어 냈다.¹²⁶⁾ 하지만 문제는 국민의 80%가 고용되어 있는 공공부문의 임금이었다는데, 이 당시 평균 150디나르였던 공공부문 임금은 1981년에 카다피가 공공부문의 임금인상을 법으로 금지시키면서 동결되었다. 이 때문에 위와 같은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리비아에서는 불법경제행위와 암시장이 횡행하였고 불법경제행위는 전체 GDP의 30~40%를 차지하게 되었다.¹²⁷⁾ 공공부문에서의 임금동결은 노동자들의 사기와 노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계기가 되었고 많은 노동자들이 두 개의 직업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82년 이후로 시작된 오일가격의 하락은 교육, 보건 등의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을 감소하게 만들었고 이는 노동자들의 사기를 더욱더 떨어뜨리게 되었다.

카다피는 이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1987년 경제개혁(인피타: *infatih*)을 실시하여 공공부문에 속해 있던 상당부분의 회사를 민영화 시켰다.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민간회사로 옮겨 갔고 일부는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로 이주하였다. 하지만 핵심적인 기간산업들은 여전히 국가의 소유였고 부정부패는 끊이지 않게 됨으로서 카다피의 개혁정책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리비아에서는 앞서 언급한 인센티브들이 고착화 되면서 대중들에게 인센티브가 아닌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하게끔 만들었다. 또한 리비아는 북한처럼 특별상금이나 특별상품과 같은 차별적인 물질 인센티브와 ‘노력영웅’의 칭호나 훈장과 같은 차별적인 비물질적 인센티브의 기제가 거의 없었다. 대신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거의 전 국민에게 5,000달러 정도의 돈을 지원하거나 배급표를 통해 필수소비재를 나눠준 적이 있지만 이는 특별한 노력으로 성과를 이룬 사람에게 차별적으로 배분되는 인센티브의 개념과 거리가 멀

125) Tim Niblock, "*Pariah States*" & *Sanctions in the Middle East: Iraq, Libya, Sudan*,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 2001., pp.74~75.

126) Abouazoum Alafi, Erik J. de Bruijn, "A change in the libyan economy: Towards a more market-oriented economy", Management of Change Conference, Lueneburg, 2009. 11. 26~27. pp.6~7.

127) Alison Pargeter, "Libya: Reforming the Impossible?" *Review of African Political Economy*, Vol. 33, No. 108, 2006., p223.

었다. 차별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것을 노력경쟁으로 유도하고 또 이를 전 사회에의 통제기제로 사용한 북한과는 달리 리비아는 물질적 인센티브를 사회통제의 기제로 사용하지 못했고 더 나아가 지도부에 대한 충성으로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오히려 석유 가격의 하락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해외로 나가 사무역에 종사하게 만들어 국내정치에 대한 무관심¹²⁸⁾ 내지는 지도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게 만들어 체제자체를 불안정하게 하였다.

3. 대응방식의 차이를 야기한 원인분석: 대내적 요인 VS. 대외적 요인

앞서 논의한 것처럼 북한과 리비아는 공통적으로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에 정치-경제적으로 기초해 있다.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북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가 결합되면서 경제적 발전보다는 사상의 강조를 통해 대중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반면 리비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대국가이론이 결합되면서 경제적 수입의 분배를 통한 대중들에 의한 정당성의 제고와 불만억제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미국의 경제제재는 양국에 서로 다른 구조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미국의 경제제재 자체는 북한과 리비아에게 공통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입혔으며 경제성장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였다. 오로지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만 본다면 경제규모가 작고 경제제재 기간 중 자연재해까지 덮쳐 수백만의 아사자를 발생시킨 북한의 경우가 피해가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제재에 대한 양국의 대응은 큰 차이를 보이게

128) 기초 인민회의의 인원들은 5,00~10,000명 정도 있었는데 이중에 실제 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700명 이었다. 때문에 총인민회의의 서기장은 이 같은 부정적인 문제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Hanspeter Mattes, "The Rise and Fall of the Revolutionary Committees", Dirk Vandewille, *Qadhafi's Libya*,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p90.

되는데 북한의 경우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어 저발전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대중들의 큰 동요 없이 체제를 이끌어 나갔으며 중국에는 핵무기 개발까지 이르렀지만 리비아의 경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중들의 동요가 심해져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양국의 이와 같은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물론 리비아와 북한은 석유자원의 유무, 자연재해의 발생 유무, 서로 다른 지정학적 위치 등 동일한 환경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두 국가는 초기에 고전적 사회주의체제라는 비슷한 정치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양국의 지도자 모두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990년대 이후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해 보여준 양국의 행태적 차이는 눈여겨 볼 부분일 것이다.

1) 대외적 요인에 대한 고찰

대외적 요인에 대한 고찰은 북한과 리비아의 서로 다른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이 대외적 요인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외적 변수는 경제제재의 경제적 손해 그리고 경제제재에 대한 국제적 공조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요인들이 제재 대상국과 경제제재에 준 효과는 <표 3-5>에 정리되어 있다.

<표 3-5> 대외적 변수의 효과 비교

북한			리비아		
항목	내용	효과	항목	내용	효과
국제사회의 지원	에너지, 식량 등	연평균 2.44억 달러 제재 효과 ↓	국제사회의 지원	無	-
경제적 손해 (국제사회의 지원 포함 연간손해)	2.5억~9.5억 달러(추정)	효과 있음 북한≥리비아 (액수)	경제적 손해 (국제사회의 지원 無: 연간)	3.5억 달러(추정)	효과 있음 북한≥리비아
경제적 손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국제사회의 지원)	약 4%~4.5%	북한≥리비아 (손해의 비중)	경제적 손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약 2.5%~3.5%	북한≥리비아 (손해의 비중)

포함)					
경제제재 이외의 경제적 손실	자연재해로 연평균 9.6억 달러의 손실 발생	제재 효과 (정책변경 가능성) ↑	경제제재 이외의 경제적 손실	국제유가 하락	제재 효과 (정책변경 가능성) ↑
주요 무역 상대국	소련, 일본, 중국 → 한국, 중국 (변경)	미국이 주요 상대국 아님 제재 효과 ↓ 북한=리비아	주요 무역 상대국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미국이 주요 상대국 아님 제재 효과 ↓ 북한=리비아
국제공조	주요 무역 상대국 중 무역축소 국가가 존재	2000년 이후 일본 제재 효과 ↑	국제공조	주요 무역 상대국 중 무역축소 없음	× 제재 효과 ↓
비고	- 북한의 경우 90년대 중반 러시아와 2000년대 초중반 일본이 무역을 축소하였으나 러시아의 경우 자국의 경제사정으로 무역을 축소 시켰고 일본은 미국의 경제제재에 동참한다는 측면이 있었음 하지만 일본이 무역축소를 한 주된 배경은 일본인 납치사건 때문. 하지만 이미 중국과 한국이 예전의 일본 이상 북한과 교역 중이어서 일본의 무역 축소의 영향은 제한적. - 대외적 변수의 여러 측면을 고려했을 때 리비아 보다 북한이 경제적 손실이 더 클 것으로 파악됨.				

우선 미국의 경제제재는 북한과 리비아의 경제에 큰 영향을 주었다.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양국 모두 최소 자국 GDP의 약 2.5%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양국의 대응방식은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 만약 이러한 차이가 경제적 효과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면 북한과 리비아의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의 차이는 설명하기 힘들어 진다. 우선 북한은 리비아에 비해 경제규모가 약 1/3 ~ 1/2 수준이며 국제사회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매년 GDP의 약 4%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이에 반해 리비아는 국제사회의 지원은 없었지만 북한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컸으며 경제적 손실도 매년 GDP의 약 2.5%~3.5% 정도로 북한보다 다소 낮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석유라는 자원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책을 변경하여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려고 하지 않았으며 2006년에는 핵실험을 감행하기에 이른다. 반면 리비아는 북한에 비해 경제상황이 나았고 경제적 손실도 GDP대비 낮은 편이었지만 결국 핵프로그램의 정책을 폐기함으로서 미국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는 두

국가 중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많이 입은 국가가 자신들의 정책을 변경할 것이라는 설명이 틀렸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또 다른 대외적 변수인 국제공조에 대해 고찰해보면 미국이 의도했던 혹은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북한과 리비아의 주요 무역대상국들이 미국의 경제제재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동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상국은 상당한 압박을 느껴 자신들의 정책을 변경할 유인이 커지게 된다. 특히 북한과 리비아의 사례에서 미국이 주요 무역국이라면 경제제재는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양국 모두 미국이 주요 무역상대국은 아니었다.

북한의 경우 앞서 설명하였듯이 제재기간인 90년대 초에는 소련(러시아)과의 무역이 급격히 줄어들고 2000년 이후에는 일본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든다. 90년대 후반까지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계속 감소하게 되었는데 이는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의 효과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리비아의 경우 막대한 양의 석유를 수출하는데 주로 유럽 국가들이 주된 고객이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지만 이들 국가들은 매년 수입량에 변화가 조금씩은 있었지만 크게 낮춘 국가나 수입을 금지시킨 국가는 없었다. 결국 북한과 리비아 모두 자신들의 주요한 무역상대국들 중 미국과의 국제공조를 위해 교역을 축소하거나 중단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좀 더 엄밀히 분석하자면 중국과 한국이 대체하기는 했지만 일본과의 무역 감소가 있었던 북한이 리비아보다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이 더 컸다. 그러나 결국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책변경을 실행함에 따라 국제공조에 의한 압박을 더 받은 국가가 정책변경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2) 대내적 요인에 대한 고찰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양국은 두 지도자 집권초기에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식 사회주의’와 결합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고 리비아의 경우 ‘지대국가이론’과 결합되는 양상을 보여주

었다.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지도자의 유일지배체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는 쉽게 말하자면 국가의 정치·경제 구조에 대한 사상적 통제강화책이었다. 반면 리비아의 지대국가이론은 석유를 팔아 외부로부터 지대가 유입되면 지도자를 비롯한 소수 엘리트가 지대의 이익을 독점하고 이를 대중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이익의 분배를 통한 통제였다. 이로서 양국의 정치·경제의 구조는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새롭게 결합된 체계 위주로 점차 재편되었다. 미국의 경제제재는 서로 다른 체제로 나아가던 두 국가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주게 되었다.

우선 양국의 경제적 구조를 살펴보면 앞서 경제적 구조 비교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고전적 사회주의의 기초위에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그리고 리비아는 지대국가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징은 고전적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큰 틀 속에서 속도를 중요시 한다는 점이며 지대국가 경제체제의 특징은 석유 판매이익을 정권안정에 사용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구조의 차이가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서로 다른 대응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요인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을 미리 하자면 “경제적 구조의 차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이다. 물론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두 국가 중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 즉,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미국이 원하는 정책변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북한과 리비아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두 국가의 경제규모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리비아가 석유 수출로 인해 전체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경제구조가 제재에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경제규모가 북한보다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덜 했다. 반면 북한은 낮은 무역의존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제재에 덜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경제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제재로 인해 더 큰 손해를 보았다.¹²⁹⁾ 물론 북

129) 북한에서 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20%(한국은행 GNI) 혹은 20~30%(UN GDP) 이고 리비아는 30~70%였다.

한의 경우 미국의 경제제재 이외에도 자연재해나 사회주의 시장의 붕괴와 같은 악재도 경제에 큰 악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을 제외하더라도 경제제재로 인해 북한경제는 리비아 보다 더 큰 타격을 입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과 리비아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특정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가 제재를 받았을 때 단순히 경제적 손실로 인해 자신들의 정책을 변경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자신들의 경제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한 손해 때문에 정책을 변경한다면 리비아 보다는 북한이 그러한 유인이 더 크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는 경제구조의 훼손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가 아니라 경제제재에 의한 경제구조의 훼손으로 인해 정권의 불안정을 야기 시키는가에 있다. 양국의 경제구조를 비교해본다면 북한은 정치에 종속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 안정에는 사상의 강조라는 또 다른 도구가 존재하였으나 리비아는 정치적 안정에 경제구조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¹³⁰⁾

따라서 북한의 경우 경제제재로 인해 경제구조가 훼손되어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정권 안정성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으며 리비아의 경우는 경제제재로 인해 경제구조가 훼손되면 정권 안정의 도구로 쓰였던 경제적 분배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양국의 경제구조의 차이는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해 서로 다른 대응을 야기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양국의 경제구조의 차이가 다른 대응을 이끌어 낸 본질적 요소라고는 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양국이 다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치적 영역에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정책변경을 할 유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한 국가의 경제구조가 대중들의 지지와 신뢰를 이끌어 내는데 얼마나 밀착이 되어 있는가의 문제이지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해 얼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아니

130) 여기서 북한에서 경제구조가 정치에 종속되었다는 말은 경제적 이익과 분배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실행되어 진다는 것이며 리비아에서 정치적 안정에 경제구조가 이용된다는 말은 사상적이고 정치적 수단 대신 경제적 이익과 분배를 통해 정권의 안정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라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양국의 정치적 구조를 살펴보면 북한의 경우 경제제재 이전부터 우리식 사회주의가 강조되면서 사상을 통한 정치우위의 체제로 변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치우위의 체제로 재편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경제제재가 시행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더욱이 90년대 초 공산주의 블록이 무너지게 되면서 거대한 마켓을 잃게 되고 자연재해로 인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면서 미국의 경제제재는 북한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하지만 북한은 선전과 선동을 통해 미국의 경제제재를 저발전의 원인으로 돌리면서 사회통합의 기제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북한체제 초기부터 작동해온 대중에 대한 3중 지도라는 정치적 구조에 유일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식사회주의 결합으로 대중들의 사상적 통제는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한 경제적 궁핍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집단에 대한 신뢰를 존속시켜 주었다.

리비아의 경우 경제제재 이전 석유수입의 분배라는 지대국가체제가 강화되면서 경제적 이익의 분배를 통해 정당성과 지지를 획득하는 경제우위의 체제로 변화하고 있었다. 리비아도 나름대로 정권안정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개편하였는데 첫째는 감시기구를 강화시켜 대중들을 통제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북한과 같이 대중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족별로 분절화 된 권력들 간에 서로 경쟁을 하게 만드는 세력균형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세력균형 방식에서 자신에게 협력하는 부족에게 핵심직책을 배정하거나 대수로 공사 개발권과 같은 경제적 혜택을 주고 충성을 다짐받았다. 반면 자신에게 협력하지 않는 부족에게는 각종 이권에서 제외시켜 불이익을 줌으로서 자신과 자신의 협력부족에게 협력하도록 만들었다.¹³¹⁾

<표 3-6> 대내적 통치구조의 차이

131) Praveen Swami, "Defeat the Libyan regime. And then?", *The telegraph*, March 21, 2011.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africaandindianocean/libya/8394647/Defeat-the-Libyan-regime.-And-then.html> (검색일: 2012년 5월 28일)

북한	대내적 요소들	리비아
고전적 사회주의 + 우리식 사회주의	통치 체제	고전적 사회주의 + 지대국가
노동당	지배 집단	혁명위원회
대중정당	지배 집단의 성격	엘리트 집단
통제/지도(밀착형)	지배 집단과 대중의 관계	통제/견제
외곽단체(인전대의 역할)	지배집단과 대중을 연결하는 조직의 유무	없음
수령의 지도가 필요한 인 민 이라는 인식	대중들의 정체성	부족에 대한 정체성이 국 가정체성 보다 큼
통일화된 인민의 형태	대중의 결합형태	민족과 부족단위의 분절적 형태
대중감시를 통한 통제// 사 상적 지도를 통한 자발적 유도. 당과 정 그리고 인전 대의 3중 지도방식	통제방식	대중감시를 통한 통제// 경 제적 이익 배분을 통한 유 도. 혁명위원회를 통한 감 시 및 통제
- 선전과 선동 그리고 교 육을 통해 지도자와 당에 대한 충성강조로 지지확득 - 생활 총화 등을 비롯한 각종 감시	지도자와 지배 집단의 대중 정당성과 지지확득 방식	- 무상으로 의료, 주택, 보 건 등을 제공하여 대중의 지지 획득 - 경제적 혜택을 빌미로 부족 간 충성경쟁
경제가 정치에 예속	정치와 경제의 관계	경제적 메커니즘을 통해 정치의 일부기능을 대체
낮음	무역의존도	높음

그러나 미국의 경제제재가 실시되면서 리비아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국제 유가의 하락과 더불어 경제제재로 매년 3억불 이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앞에서 열거한 자신에게 협력하는 부족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 대한 경제적 혜택의 양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다.¹³²⁾ 하지만 북한과 같은 최악의 경제적 손실은 아니었음에도 불

132) 1990년대 들어 카다피는 공공분야의 투자를 줄이고 이를 민간으로 이전하였다. Tim Niblock, "Pariah States"& Sanctions in the Middle East: Iraq, Libya, Sudan,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 2001, p. 63.

구하고 이에 대한 대중들의 동요는 북한에 비해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 1992년과 1993년에 UN의 대 리비아 경제제재가 부과되면서 리비아는 더 큰 혼란으로 빠져들게 되었다.¹³³⁾

<그림 3-6> 리비아의 소요사태



출처: 1980년 까지는 Banks, Arther, *Cross-National Time-Series Data Archive*, Binghamton, NY: Banner Software, Inc. 조동준, “리비아의 비핵화 선택연구”, 17차 세종국가전략포럼 발표논문, 2008. 03. 05., p37에서 재인용. 1980년 이후부터는 Qadhafi's tribal woes, <http://www.davidblink.com/QTW/pages/threat.aspx> ; Dirk Vandewille, *Qadhafi's Libya*,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p34. ; George Joffe, "Unrest in Linya", *Mediterranean Politics*, Vol.1, No.2, 1996. pp. 261~263. ; 동아일보, "英 96년 리비아 카다피 암살기도 개입...무기-자금 제공", 2000. 02. 13. ; Hanspeter Mattes, "Challenges to Security Sector Governance in the Middle East: The Libyan Case", *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s*, 2004. 07. pp. 26~28. ; <http://www.cursed soul.com/home/?p=1265> ; Alison Pargeter, "Violence in

133) 암살, 혁명, 반란, 시위, 폭동 등의 소요사태는 카다피의 집권이후 계속되어 왔다. 그 이유는 카다피의 국정운영철학이 이슬람의 교리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카다피를 암살하려고 시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리비아는 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부족 간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일부 부족은 쿠데타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이러한 양상은 변하기 시작했는데 기족의 이슬람 극단주의자와 타 부족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항의하기 위해 시위를 벌였고 이들 중 일부는 물리적 저항을 하기도 하였다.

Libya", *Mediterranean Politics*, 2010. 04. 08., pp. 89~90. 을 토대로 필자가 작성.

이러한 배경에는 리비아가 지대국가(Rentier State)로서 대중 통제
정당성을 석유판매 이익으로 교환(Trade-off)해왔기 때문에 북한과 같이
핵심집단이 대중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구조를 형성하지 못한 것에
있었다. 즉 리비아는 고전적 사회주의와 지대국가가 결합되면서 정치구조
보다는 경제구조의 우위를 통해 대중들의 지지를 이끌어 냈었는데 미국
의 경제제재가 실시되고 난 이후 정당성과 지지를 획득하던 메커니즘에
타격을 입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카다피는 미국과의 화해를 통해 경제를
되살려 경제제재 이전의 메커니즘으로 회귀하려고 했었던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양국의 정치 구조의 차이는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해 서로 다
른 대응을 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IV. 결론: 요약 및 시사점

기존의 연구들이 미국의 강압적 전략에 초점을 맞춘 경우와 미국의 강압적 전략과 동시에 제재대상국인 두 국가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경우 그리고 제재대상국인 두 국가의 내부변수에 초점을 맞췄지만 경제적 영역에 국한되어 분석을 해왔다면 본 연구는 제재대상국인 북한과 리비아의 정치·경제적 구조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 경제제재의 국제적 공조, 북한과 리비아의 정치구조, 북한과 리비아의 경제구조 라는 총 4가지 변수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한대로 이들 4가지 변수는 각각 북한과 리비아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주도한 경제제재는 북한과 리비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 북한과 리비아의 정치·경제적 환경이 다른 점은 이들 두 국가의 비교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어떤 특정한 한 요인이 독단적으로 정책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 중 어떠한 것이 정책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인지를 밝혀내는데 주력하였다.

첫 번째 변수인 미국의 경제제재의 강도의 차이는 북한과 리비아에서 비슷했거나 오히려 북한이 더 강했다고 판단된다. 북한은 리비아와 달리 90년대 초반 미국의 경제제재와 사회주의 블록의 붕괴, 그리고 자연재해까지 겹쳐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북한의 경제규모가 리비아에 훨씬 못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미국의 경제제재는 북한에게 더욱 심각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리비아와 달리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해왔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제재의 강도의 차이가 이들 두 국가의 정책적 차이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두 번째 변수인 경제제재의 국제공조 차이는 두 국가 모두 해당사항이 없는 듯하다. 두 국가 모두 주요교역국들 중에 미국이나 UN이 주도하는 경제제재에 동참하여 교역을 중단 하거나 교역량을 현저히 감소시킨 국

가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의 경우 일본이 2000년대 중반부터 무역액을 줄이지만 이는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일본인 납치사건에 대한 불만의 표시였다. 그리고 이미 북한은 일본의 이러한 무역 감소를 대체할 수 있도록 2000년대 이후 중국 그리고 한국과의 무역을 점차 확대시켜 나갔기 때문에 일본의 무역축소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따라서 국제공조의 차이로 두 국가의 정책적 차이를 설명하는 것도 힘들어 보인다.

세 번째, 두 국가의 경제구조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체제상으로 보면 양국은 둘 다 고전적 사회주의경제체제에 기반 하고 있다. 그러나 리비아의 경제체제가 개혁적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경제를 강조하는 지대국가(Rentier State)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복합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반해 북한은 고전적 사회주의경제체제에 기반 하여 ‘우리식 사회주의’가 결합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식 사회주의는 수령을 강조하는 사상적 강조에 기반 하여 수령을 위해 개별사업에서 속도를 내어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이바지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경제는 경제구조를 변형을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라 고전적 사회주의 경제체제 내에서 경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하위체제 개념이었다. 이처럼 북한과 리비아의 다른 경제구조 하에서 미국의 경제제재는 양국에게 서로 다른 효과를 주었다. 하지만 이것이 경제제재에 대한 북한과 리비아의 서로 다른 대응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북한과 리비아 모두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인해 미국에 대해 정책적 양보를 통해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유인이 컸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오히려 리비아 보다 북한이 경제적 유인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리비아와 같이 정책적 양보를 통해 경제지원과 무역금지 해제 등의 실리를 얻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구조를 살펴보면 북한과 리비아는 서로 비슷한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두 국가 모두 최고지도자와 이를 보위하는 핵심 집단들(북한-로동당, 리비아-혁명위원회)이 있으며 이들은 군과 정의 상

위에 위치해 있고 이들을 통제한다. 그리고 이들이 의사결정을 군과 정에게 하달하며 군과 정은 이를 대중들에게 하달하는 방식도 유사하다. 하지만 이들 두 국가의 정치구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기 다른 체제와 결합하면서 서로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북한의 경우 고전적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우리식 사회주의가 결합되면서 유일지배체제 강조, 사상 강조, 대중과의 밀착 심화라는 정치적 구조에서의 변형을 가져온 것이다. 당은 3중으로 대중들과 밀착해 있었으며 수령-당-대중의 유기적 결합으로 대중을 통제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사상 강화를 통해 수령과 당의 정책을 지지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리비아의 상황은 달랐다. 리비아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에 기반을 두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대국가체제와 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방식도 사상이나 정치의 강화가 아닌 경제적 수익 배분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서로 다른 민족과 부족들이 혼재되어 있는 다 민족체제였기 때문에 북한의 노동당에 해당하는 혁명위원회는 북한과 같이 대중들과 유기적인 결합이 이루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카다피의 제3세계 이론은 기존의 이슬람의 교리와의 충돌하였다. 그래서 리비아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부족 간의 충돌이 일어났고 그들 중 일부는 카다피의 암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지대수입 분배의 대중 지지기반, 환경적 제약, 사상의 강조를 통한 통합의 실패는 정치적 구조가 아닌 경제적 구조를 우선시 하게 만들고 경제적 구조 우위체제를 구축하게 만들었다. 결국 리비아는 핵심(지배)집단과 대중을 정치적 구조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데 실패하였다. 그 결과 대중은 통합되지 못하고 정부도 이들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러한 양국의 정치-경제적 구조의 차이는 미국의 경제제재가 부과된 뒤에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북한의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제재 상황 하에서도 경제적 인센티브 대신 사상적 인센티브 고취를 통한 유일지도체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대중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북한은 경제제재로 인한 불안정성을 정치

구조를 통해 통제함으로서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안정 속에서 북한은 굳이 정책변화를 피하여 미국의 지원을 얻어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리비아는 대중들을 적극적으로 통제 내지는 통합할 수 있는 정치적 기제의 부재 속에서 비정기적인 수입의 분배라는 경제적 수단에 의존하여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는 방식이 고착화 되어갔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제재를 받게 되자 경제적 상황의 악화로 인해 대중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 되었다. 따라서 카다피는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변경(핵 프로그램 포기)을 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정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지원을 받아 다시 경제적 이익을 대중에게 분배함으로서 정치적 안정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본다면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북한과 리비아의 서로 다른 방식의 대응은 대외적 변수보다는 대내적 변수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으며 대내적 변수 중에서도 경제구조 보다는 정치구조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김정일과 리비아의 카다피는 공통점이 많았다. 둘 다 같은 해인 1942년에 태어났으며 둘 다 같은 해인 2011년에 죽었다. 또한 둘 다 오랜 기간 독재를 해왔던 점과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권력을 이양하려고 했던 것도 닮은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둘의 죽음은 상당히 달랐다. 한 명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대중들의 애도 속에 영예롭게 죽어간 반면 또 다른 한명은 성난 시위대에 의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것이다. 이 두지도자의 죽음은 얼핏 보면 본 연구와 전혀 무관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본 연구가 내내 주장했던 것과 맞닿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치구조의 차이이다. 이 말은 국가의 정치구조가 대중들의 지지와 신뢰성 그리고 정당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조였는가의 차이라는 것이다.

흔히 경제제재를 부과함에 있어 경제제재를 받는 대상국이 무역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제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클수록 경제제재의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밝혔듯이 리비

아의 경우 북한보다 월등히 높은 무역의존도를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미국의 경제제재가 시행된 이후에도 리비아의 주요 석유 수입국들의 수입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북한에 비해 경제적 손해가 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원하는 방향(본 연구에서는 핵 프로그램의 포기)으로 움직였고 반대로 북한의 경우는 경제적 손실이 커서 정책변경 유인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점은 제재대상국의 무역의존도와 경제적 손해가 큰 상관관계가 없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북한과 리비아 사례에서 시사하는 바는 경제제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제재대상국의 정치와 경제의 구조라는 대내적 요인이며 그 중에서도 정치적 통치 구조가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양국이 미국의 경제제재에 다르게 대응했던 이유는 양국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론을 다른 사례에 적용하여 일반화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 더 많은 사례들을 참고하여 분석한다면 더 풍부하고 유익한 시사점이 도출될 것이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1차 자료

1) 북한 자료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1982.

조선로동당 규약(제6차 당대회 개정 1980년 10월 13일)

2) 리비아 자료

Mu'ammar Al-Qaddafi, *The Green Book*, Tripoli: The Green Book World Center, 1980.

3) 미국 자료

미국 연방기록부(Federal Register) 홈페이지

www.federalregister.gov/articles/search?commit=Go&conditions%5Bterm%5D=12543&conditions%5Btype%5D=PRESDOCU

미국 전자연방규정법규(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홈페이지

http://ecfr.gpoaccess.gov/cgi/t/text/text-idx?c=ecfr&tpl=/ecfrbrowse/Title16/16cfr500_main_02.tpl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748

<http://daccess-dds-ny.un.org/doc/RESOLUTION/GEN/NR0/011/07/IMG/NR001107.pdf?OpenEleme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883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N93/626/78/PDF/N9362678.pdf?OpenElement>

Title 12 U. S. C. § 95a.

Title 50 U. S. C. § 1621-1622.

Title 50 U. S. C. § 1701-1706.

2. 2차 자료

1) 영문 단행본

Alexander L. George, "Coercive Diplomacy", *The Limits of Coercive Diplomacy*,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94.

Chalmers Johnson, "Comparing communist nations",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David A. Baldwin, *Economic Statecraf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Dirk Vandewille, *Qadhafi's Libya*,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Gary Clyde Hufbauer, Jeffrey J. Schott, and Kimberly Ann Elliot,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History and Current Policy*, Washington D.C.: Institution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0, second edition.

Hazem Beblawi, Giacomo Luciani, *The Rentier State*, New York: Croom Helm, 1987.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John Davis, *Libyan Politics: Tribe and Revolution*, London: I.B.TAURIS & Co Ltd Publishers, 1987.

Lisa L. Martin, *Coercive Cooperation: Explaining Multilateral Economic Sanc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Luis Martinez, *The Libyan Paradox*,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Mansour O. El-Kikhia, *Libya's Qaddafi: The Politics of Contradiction*, Gainesvill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1997.

Marcus Noland, "The Political Economy of North Korea: Historical Background and Present Situation", *A New International Engagement Framework for North Korea?*, AEI, 2004.

Robert O. Keohane, Joseph. S. Nye, *Power and Interdependence*, Longman, 1977.

Stephan Haggard & Marcus Noland, *Famine in North Korea: Markets, aid, and refor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Tim Niblock, *"Pariah States"& Sanctions in the Middle East: Iraq, Libya, Sudan*,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 2001.

Tuxhorn Kim-Lee, *A Comparative Study of Nuclear Rollback: Libya, South Africa, Argentina and Brazil, and Romania*, Degree of Maste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9.

2) 영문논문

Abouazoum Alafi, Erik J. de Bruijn, "A change in the libyan economy: Towards a more market-oriented economy", Management of Change Conference, Lueneburg, 2009. 11.

Alison Pargeter, "Libya: Reforming the Impossible?" *Review of African Political Economy*, Vol. 33, No. 108, 2006.

_____. "Violence in Libya", *Mediterranean Politics*, 2010. 04. 08.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U.S./UK Negotiations with Libya regarding Nonprolifer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8, No. 1, 2004, 02.

Andrew S. Natsios, "North Korea's Chronic Food Problem", Stanford University Koret Conference "DPRK 2012", 2011. 02. 24.

Anjali Bhattacharjee, Sammy Salama, "Libya and Nonproliferation", CNS Research Story, 2003. 12. 23.

Bruce G. Comings, "Kim's Korean Communism", *Problems of Communism*, 1974. 03.

Bruce W. Jentleson "Economic Sanction and Post-Cold War Conflicts: Challenges for Theory and Policy", *International Conflict Resolution: After the Cold War*, Washington D. C.: National Academy Press 2000.

- Bruce W. Jentleson and Christopher A. Whytock, "Who "Won" Libya?: The Force-Diplomacy Debat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ory and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3, Winter 2005. 06.
- Camille Tawil, "Mapping Qaddafi's Tribal Allegiances in Libya: An Overview", *Terrorism Monitor*, Vol. 9, Issue 17, 2011. 04. 28.
- Camilla Sandbakken, "The Limits to Democracy Posed by Oil Rentier States: The Cases of Algeria, Nigeria and Libya", *Democratization*, Vol. 13, No. 1, 2006.
- Christopher Boucek, "Libya's Return to the Fold?" *FPIF Policy Report*, April 2004.
- Christopher M. Blanchard, Jim Zanotti, "Libya: Background and U.S. Rela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2011. 02. 18.
- Dirk Vandewalle, "Qadhafi's "PERESTROIKA": Economic and political liberalization in Libya", *Middle East Journal*, Vol. 45. No. 2, Spring 1991,
- Emanuela Paoletti, "Libya: Roots of a Civil Conflict", *Mediterranean Politics*, Vol. 16, No. 2, July 2011
- George Joffe, "Islamic opposition in Libya", *Third World Quarterly*, Vol. 10, No. 2, 1988.
- _____. "Unrest in Linya", *Mediterranean Politics*, Vol.1, No.2, 1996.
- Hanspeter Mettes, "Challenges to Security Sector Governance in the Middle East: The Libyan Case", DCAF Conference Paper, 2004. July.
- Hossein Askari and John Forrer, "Measuring Vulnerability to U.S. Foreign Economic Sanctions", *Business Economics*, April 2005,
- J. A. Allan, "Libya accommodates to lower oil revenues: economic and political adjustments", *Middle East Study*, Vol. 15, 1983.
- Luis Martinez, "Libya: The Conversion of a 'Terrorist State'", *Mediterranean Politics*, Vol. 11, No. 2, July, 2006.
- Lisa Anderson, "Religion and State in Libya: The Politics of Identity",

-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483, January, 1986.
- _____, "Rogue Libya's Long Road", *Middle East Report*, No. 241, Winter, 2006.
- Marcus Noland, "The (Non) Impact of UN Sanctions on North Korea", Working Paper series, Peterson Institution for International Economics, December, 2008.
- Mary-Jane Deeb, "Qadhafi's Changed Policy: Causes and Consequences", *MiddleEast Policy*, Vol. VII, No. 2, February, 2000.
- Meliha. A. B., "A Rentier state's response to oil crisis: economic reform policies in Libya", *Arab Studies Quarterly*, Vol. 18. No. 4.
- Nassr S. Ahmad, Simon S. Gao, "Changes, problems and challenges of accounting education in Libya", *Accounting Education*, 13(3), 2004. 09.
- Posen, Barry. R. and Ross, A. L. "Competing Visions of U.S. Grand Strategy." *International Security*, Volume 21, Number 3, Winter 1996/97.
- Potter, William C. "The Politics of Nuclear Renunciation: The Cases of Belarus, Kazakhstan, and Ukraine", The Henry L. Stimson Center. Occasional paper No. 22, April 1995.
- Randall Newnham, "Carrots, Sticks, and Bombs: The End of Libya's WMD Program", *Mediterranean Quarterly*, Summer 2009.
- Rennack, D. E., and Shuey, R. D., "Economic Sanctions to Achieve Foreign Policy Goals: Discussion and Guide to current Law," CRS Report for congress, 97-949 F.
- Rennack. D. E., "North Korea: Economic Sanc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2006. 10. 17.
- Richard Haass, "Economic Sanctions: Too Much of a Bad Thing", Policy Brief #34. Washington: Brookings Institution. 1998. 06.
- _____. "Regime Change and Its Limits", *Foreign Affairs*, Vol. 84, No. 4, July/August, 2005.

Robert A. Pape, "Why Economic Sanctions Do Not Work", *International Security*, Vol. 22, No. 2, Fall, 1997.

Sharon Squassoni, "Disarming Libya: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RS Report for Congress, 2006. 09.

Sara Vakhshouri, "Measureing the effect of political instability in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on global energy security",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USAEE Working Paper No. 30, 2011. 10. 11.

U.S. Information Agency, "Overview of U.S. Export Control Act", Economic Perspectives, *An Electronic Journal of the U.S. Information Agency*, Vol. 2. No. 4, 1997. 09.

Varun Vira and Anthony H. Cordesman Arleigh A. Burke Chair in Strategy, "The Libyan Uprising: An Uncertain Trajectory", Center for Strategic International Studies, 2011. 06. 20.

Velazquez, Arturo C. Sotomyor, "Civil-Military Affairs and Security Institutions in the Southern Cone: The Sources of Argentina-Brazilian Nuclear Cooperation",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Vol. 46, No. 4, Winter 2004,

Yahia H Zoubir, "Libya in US foreign policy: from rogue state to good fellow?", *Third World Quarterly*, Vol 23, No 1, 2002.

3) 국문 단행본

김상기, “대북경제제재의 유효성 분석: 실태와 효과”, 『정책연구시리즈 2007-09』, 서울: 한국개발연구원(KDI), 2007. 09.

미즈라 미츠히로,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박선숙, 『고립된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과 미국의 대외전략: 이란, 리비아, 북한 사례를 비교하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9.

박영호, 『리비아 경제제재 해제와 건설시장 확대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03.

- 스테판 해거드 · 마커스 놀란드(이형욱 역), 『북한의 선택: 위기의 북한경제와 한반도 미래』,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07.
- 신석호, 『김정일과 카스트로가 경제위기를 만났을 때』, 서울: 전략과 문화, 2008.
-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서울: 서울대출판부, 2001.
- 양운철,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원인, 과정, 전망』, 성남: 세종연구소, 2001.
- 유영옥 · 강석승, 『국제사회와 북한』, 서울: 弘益濟, 2004.
- 윤영관 · 박선원, 『북한의 체제전망과 남북경협』,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 윤영관 · 양운철,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와 사회: 계획에서 시장으로?』, 서울: 한울, 2009.
- 이석기,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와 기업형태의 변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3.
- 21세기 중동이슬람문명권 연구사업단, 『중동정치의 이해 3』,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 이정철, 『사회주의 북한의 경제동학과 정치체제: 현물동학과 가격동학의 긴장이 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5.
- 이지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와 ‘해제프로세스’ 전망: 리비아와 베트남 사례가 주는 시사점』, 석사학위 논문, 북한대학원대학교, 2008.
- 정영철, 『북한의 개혁 · 개방: 이중전략과 실리사회주의』, 서울: 선인, 2004, _____, 『김정일 리더십 연구』, 서울: 선인, 2008.
- 정영태, 김연철, 서상현,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리비아와 쿠바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조명철 · 김지연 · 홍익표, 『핵 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개발 지원경향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 통일교육원, 『김정일 현지도 동향 1994~2008』, 서울: 통일교육원, 2009.
-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통일원,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 종합평가』, 통일원, 1994.

하상식, “북한경제의 개혁전망: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격평가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32집. 2004.

4) 국문논문

김일기, “체제변화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개혁·개방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제1호 2006.

문순보, “북핵문제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가전략』, 제16권 2호, 2010.

성채기, “국제적 대북제재의 현황과 군사·경제적 영향분석 및 전망,” 『국방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통권 제86호, 2009.

양문수, “시장 억제 정책기 북한의 시장화: 실태와 함의(2007-09년), 「통일기 반조성을 위한 다 학제적 접근」, 서울대학교 2010년 통일학 기초연구 심포지움 발표논문, 2010년 2월.

윤영관,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정치경제,” 서울대학교 2010년 통일학 기초연구 심포지움 발표논문, 2010.

윤충원, “미국의 경제제재법규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 1호, 2004. 06.

정연호,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변화 추이 및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2004. 07.

정영철, “북한 사회통제 메카니즘의 변화와 특징: 사상적, 물질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고찰,” 『統一問題研究』 97년 하반기호(통권 제28호), 1997.

정형근·나승권·박철형 “우크라이나 및 리비아 WMD(대량살상무기) 해체 사례와 북핵문제 해결에의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Vol. 7, No. 17, 2007.

조동준, “리비아의 비핵화 선택연구,” 17차 세종국가전략포럼 발표논문, 2008. 03. 05.

한덕규, “리비아 경제개방의 과제와 전망,” 『중동연구』, 제24권 1호, 2005.

홍순식,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실효성: 리비아 사례와 비교,” 『東亞研究』, 第53輯 2007, 08.

홍익표,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제재가 북한경제 미치는 영향,” 『세계경제』, 2003. 07.

5) 북한자료

로동신문, 1995년 6월 15일자.

6) 인터넷 웹사이트 및 신문

(1) 해외 웹사이트

Encyclopedia of the Nations,

<http://www.nationsencyclopedia.com/Africa/Libya-GOVERNMENT.html>

Globalsecurity홈페이지, "Libya-Tribes",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libya/tribes.htm>

IIE(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Case Studies in Sanctions and Terrorism", <http://www.piie.com/research/topics/sanctions/libya3.cfm>

석유수출기구(OPEC) 웹사이트, http://www.opec.org/opec_web/en/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1999.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2004.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2007.

Qadhafi's Tribal Woes, "Tribal Treat",

<http://www.davidblink.com/QTW/pages/threat.aspx>

SIPRI armstrade database

http://armstrade.sipri.org/armstrade/page/trade_register.php

UN웹사이트 <http://www.un.org>

UNESCO-IBE, "Libyan Arab Jamahiriya", World Data on Education, 6th, 2006/07.

<http://www.ibe.unesco.org/en/services/online-materials/world-data-on-education.html>

쟁거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zanggercommittee.org/Seiten/default.aspx>

(2) 국내 웹사이트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71>

84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http://munibook.unikorea.go.kr/?sub_name=information&cate=1&state=view
&idx=108&page=5&ste](http://munibook.unikorea.go.kr/?sub_name=information&cate=1&state=view&idx=108&page=5&ste)

조동준, “왜 핵무기를 포기할까”, 한반도평화연구원, p14.

http://www.koreapeace.or.kr/modules/forum/forum_view.html?fl_no=380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 웹사이트, <http://www.kotra.or.kr>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1991~2010년 호.

(3) 신문 및 인터넷 미디어

동아일보, “헬름스 법과 디마토 법”, 1998년 4월 28일

http://news.donga.com/Series/List_70020000000018/3/70020000000018/19980428/7341026/1

동아일보, “핵개발 두 손 든 리비아…북한의 선택은?”, 2003. 12. 21

<http://news.donga.com/3/all/20031221/8013064/1>

연합뉴스, “蘇,대북(對北)무역 경화결제 무역다변화 위한 것”, 1990년 12월 06일

<http://media.daum.net/breakingnews/view.html?cateid=100000&newsid=19901206102000293&p=yonhap>

통일뉴스 -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214>

부록1: 미국의 대북한, 대리비아 경제제재의 법적 근거와 메커니즘

미국의 對북한, 對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법에 근거하여 부과되는데 여러 법에 근거하여 대통령이나 의회에서 각종 경제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상술하자면 경제제재에 관련한 법적 근거는 대통령의 권한 또는 의회가 결의하여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수정하여 통과시킨 의회법에 기초하고 있다. 우선 대통령의 권한을 살펴보면 미국 대통령은 국가안보 또는 외교 정책을 이유로 적성국교역법(TWEA: Trading With Enemy Act of 1917)¹³⁴⁾과 국가비상법(NEA: National Emergency Act)¹³⁵⁾, 그리고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f 1977)¹³⁶⁾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폭넓은 제재가 가능하다. 또한 대외원조법(FFA: Foreign Assistance Act) 621조에 따라 대외원조프로그램을 운영할 권한을 부여받아 특정국가에 대해 대외원조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수출입은행법 2(b)(1)조에 따라 특정국가에게 수출입은행의 신용을 부여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대통령은 특정한 법안을 만들 수는 없지만 기존의 법규에서 위임된 권한을 바탕으로 행정명령 등을 통해 다양한 경제제재가 가능한 것이다. 이에 반해 의회는 폭넓은 제재는 불가하지만 특정한 경우에 경제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할 수 있는데 이는 특정 이슈와 관련하여 주로 제정된다. 의회는 1970년대와 80년대 들어서 대통령 또는 행정 부서에 인권, 테러지원, 종교의 자유, 민주주의 문제 등을 가지고 미국의 ‘일방적 경제 제재’시행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대외원조법(FAA: 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과 통상법(Trade Act of 1974)의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시작으로 1980년 카터 정부 때 수출관리법의 수정으로 이라크에 대한 선박 수출 통제를 부과하는 등의 수정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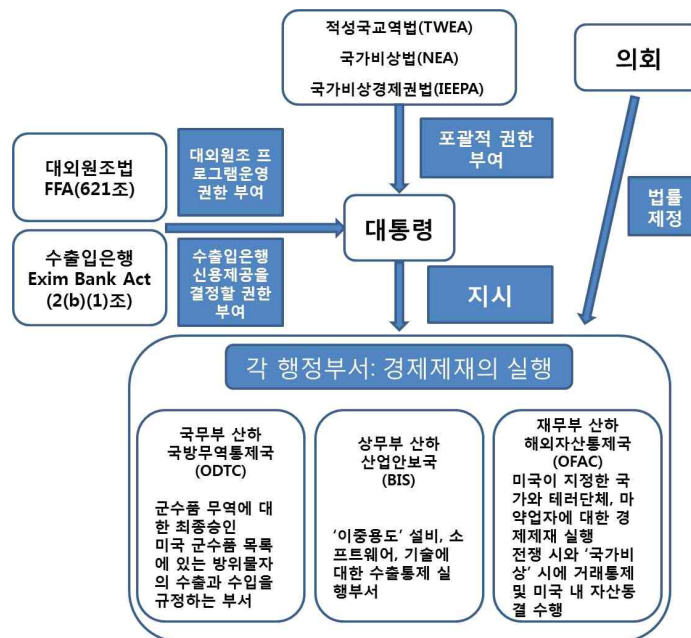
134) Title 12 U. S. C. § 95a.

135) Title 50 U. S. C. § 1621-1622.

136) Title 50 U. S. C. § 1701-1706.

안이 의회에서 제정되었다. 1990년대에는 헬름스-버튼법(Helms-Burton Act of 1996¹³⁷)으로 쿠바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고, 이란-리비아 제재법(ILSA)¹³⁸으로 이란과 리비아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부록 - 그림 1> 미국의 경제제재를 위한 법적근거와 메커니즘



출처: 이지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와 ‘해제프로세스’ 전망: 리비아와

137) 일명 ‘쿠바자유민주연대법’이라고도 하며 헬름스-버튼법은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를 위해 공화당의 제시 헬름스 상원의원과 덴 버튼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제정된 법으로 1996년 발효됐다. 주 내용은 쿠바와 거래하는 외국기업의 경영진 주주 가족들의 미국 입국 금지 1959년 쿠바혁명으로 쿠바에 5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억류당한 미국인이나 기업들이 쿠바에 투자한 외국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허용 등이다. “헬름스-버튼법과 디마토법”, 『동아일보』, 1998년 4월 28일
http://news.donga.com/Series/List_70020000000018/3/70020000000018/19980428/7341026/1 (검색일: 2012. 03. 20)

138) 대통령이 이란 또는 리비아 석유자원개발을 위하여 1년에 4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국가에 대해 경제제제조치를 취하도록 한 규정으로 항공기 및 정유시설 등을 리비아에 수출하는 국가에 대해 경제제제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제제제조치에는 미국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금지, 미국이 통제하는 수출품의 면허거부,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부금지, 미국 정부구매를 위한 입찰참가금지 등이 있다. 윤충원, “미국의 경제제재법규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 1호, 2004. 06. p118.

베트남 사례가 주는 시사점, 석사학위 논문, 북한대학원대학교, 2008, pp. 14~19. 토대로 작성.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과 의회가 타국에 대해 시행한 경제제재의 법적근거는 아주 다양하지만 미국의 對북한, 對리비아에 대해 시행한 경제제재의 법적 근거는 크게 국가안보를 위한 제재법규, 대량살상무기 수출·확산과 테러리즘에 관한 제재법규,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제재법규라는 3개의 카테고리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법규들에 근거하여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나 의회의 관련법규 제정에서 경제제재의 구체적인 수단들이 만들어 진다. 다음은 미국의 북한과 리비아 경제제재에 대한 주요 법적 근거들이다.

<부록 - 표1> 미국의 북한과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의 주요 법적 근거

근거	관련법	내용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제재	방위산업법 Defense Production Act (1950)	타국의 대미투자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할 경우 그 투자를 차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
	수출관리법 Export Administration Act (1979)	통제국가에 대한 제재와 수출통제 정의 미 대통령은 동법에 따라 통제국가 목록 작성. 테러지원국에 이중용도 제품 및 기술수출 시 허가가 필요.
대량살상무 기 수출, 확산과 테러리즘에 관한 제재	무기수출통제법 Arms Export Control Act(1976)	미국산 군수품을 테러지원국에게 직,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출, 재수출, 인가, 여타 방법으로 제공금지
	핵확산금지법 Nuclear-Non Proliferation Act (1978)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되어 있는 국가와 거래하는 기업, 개인에 대해 미국정부 모든 거래 중단(수출입 허가나 군수물자 계약을 전면 금지,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도 관련국과의 거래정황 포착되면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음
	국제금융기관법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ct(1988)	인권침해국가나 국제테러범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국가 등에 대해 국제금융기관의 미국 집행이사들은 대출이나 금융지원 및 기술지원의 연장에 대해 반대
	대외활동 수권법 Foreign Operations, Export Financing, and Related Programs Appropriation Act(1991)	국제테러 행위를 지원한 국가에 대해 상호원조기금 사용금지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제재	적성국 교역법 Trade with the Enemy Act(1917)	재무부 승인 없이 적성국과의 교역금지
	브레튼우즈협정법 Bretton Woods Agreements(1944)	공산국가에 대한 제제조항 포함 공산국가에 대한 IMF, 세계은행의 원조반대의무화
	수출입은행법 Export-Import Act(1945)	수출입은행을 통한 공산국가와 거래금지
	무역협정연장법 Trade Agreements Extension Act(1951)	공산국가에 대한 최혜국대우 부여 금지 북한의 경우 일반특혜관세 공여 금지
	대외원조법 Foreign Assistance Act(1961)	인권침해국가, 공산국가, 테러지원국 등에 대한 지원 및 원조금지

출처: 양운철,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원인, 과정, 전망』, 성남: 세종연구소, 2001, 조명철·김지연·홍익표, 『핵 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개발 지원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한덕규, “리비아 경제개방의 과제와 전망”, 『중동연구』, 제24권 1호, 2005. 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앞서 언급한 3가지 카테고리에서 나온 다양한 법규들은 북한과 리비아에 대한 미국의 다양한 경제제재를 부과하는데 있어 법적인 근거역할을 하며 여기서 대통령의 지시로 인한 행정명령과 의회의 맞춤형 특별법들이 파생된다.

부록 2: 경제제재로 인한 리비아의 손실(표)

<부록 - 표2> UN에 의한 제재의 손실

항공기 및 관련부품 금수조치에 따른 교역 감소: 1993~1996년간 수입액이 1988~91년 대비 50% 감소 하는 사회적 손실(welfare loss)발생	700만 달러
석유장비 금수조치에 따른 가격상승: 유럽의 대리비아 석유장비 수출가격(1992년 기준)의 5%에 해당하는 후 생손실	1억 1,500만 달러
무기 금수조치에 따른 교역 감소: 1988~91년간 연평 균 수입액의 10%에 해당하는 사회적 손실 발생	7,000만 달러
항공기운항중단조치에 따른 여행 및 운송비용 상승: 1988~90년간 연평균 여행 및 운송비용의 10%에 해당 하는 사회적 비용 발생	9,000만 달러
총 계	2억 8,200만 달러

<부록 - 표3> 미국에 의한 경제제재의 손실

1982~1985년	리비아산 원유수입금지	1억 100만 달러
	수출입 제한조치에 따른 양국 간 비석유제품의 교역감소	1,000만 달러
	미국인 석유기술자(750명) 철수	600만 달러
	보잉제트기 판매중단(교역10% 에 해당하는 사회적 비용발생)	6,000만 달러
	불태환(nonconvertible curren cies)국의로의 교역이전에 따른 구매력 감소	28억 5,000만 달러
1982~1985년간 연평균 손실비용		1억 5,100만 달러
1986~2003년	금수조치에 따른 미국-리비아 간 교역감소	2억 5,300만 달러(연간)
	미국 내 리비아 자산동결	9,700만 달러(연간)
1986~2004년간 연평균 손실비용		3억 5,000만 달러

Abstract

A Study on the Responses of Targeted States against Economic Sanctions

Cases of North Korea and Libya

JunWoo Do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provide reasons for targeted states' different responses against the economic sanctions. It particularly focuses 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cases of North Korea and Libya. North Korea and Libya were imposed with economic sanctions by the USA due to their charges on terrorism. However the two countries' responses to the sanctions were quite different.

North Korea maintained its own policy, despite the economic hardship caused by the sanction. Furthermore, it carried out the nuclear experiment in 2006, which shocked the entire world. On the other hand, Libya's responses were different from the one that North Korea showed. Libya made efforts to cast off the economic sanction by changing their policy. The most significant example of these policy changes is disposing its nuclear programs.

Thus, this study aims to answer the question, "why the two countries reacted differently against the economic sanctions?" In order to do this, this study closely looks at the time period from the mid-1980s to the mid-2000s, which was the time when the economic sanctions of the USA were actively being imposed upon the two countries, North Korea and Libya. It then analyzes both external and internal variables to figure out if any of the two affected the two countries's reactions against the sanctions.

External variables have the two factors; one is domestic economic damages caused by the sanctions and the other one is international cooperations. The bigger the economic impacts of the sanctions on the targeted countries, the higher the possibilities that the target to change its policy. Also,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actor tells us that if the key countries with strong trade relations with the targeted countries takes part in the economic sanctions led by the USA, the target tends to change its policy. Internal variables can be divided into the factors again;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s. Political instability is more likely to cause policy changes of the targeted country. Also, economic vulnerability increases the possibilities for policy changes as well.

In terms of the two factors of the external variables, North Korea had more of the economic damages while the both countries were hardly influenced by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erms of political structures, which is one of the factors of the internal variables, North Korea has a stronger political structure with closer and more stable relations with the bureaucrats and the public. From the economic structure perspective, Libya has more open economic structure than North Korea, but the fact that Libya's major national income depends on oil exports makes it

more vulnerable to the sanctions.

Thus, this study finds that the political structure factor is the strongest cause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responses against the sanctions. In the end, it implies that the target country is not likely to change its policy if it has very strong political structures, despite significant economic damages.

key words : economic sanction of the USA, North Korea's responses, Libya's responses, political-economic structure, policy changes.

Student Number : 2009-20112